

경제정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잡지!

나라경제

<http://nara.kdi.re.kr>

4

Vol.197 April 2007



ISSN 1227-8033

10년 불황 이겨낸



그 원동력은?

특별기획 | '공공기관법', 공공기관 투명경영의 초석을 놓다

초점 | 외국인근로자, 우리 경제와 윈-윈 하려면

유해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해외진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해 드려요
폐기물 부담금 최대 20배 올려



꽃향기 가득한 봄길,
같이 달려보실래요?





019 특집 10년 불황 이겨낸 일본 그 원동력은?

- 020** 점진적 구조개혁 통해 장기불황 탈출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 024** 후퇴 없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일본경제 부활의 원동력 정태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028** 공장 생산혁신 통해 기업체질 튼튼히 오재현 日 동경대 제조경영연구센터 교수
- 032** “돈만 생기면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다카스기 노부야 한국후지제록스(주) 최고고문
- 036** 민간기업에 최대한 자율을 이종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012 Zoom up! 이 사람 이호철 부산지방조달청장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죠”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008 탐방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풍요로운 바다를 가꾼다

이 울 연합뉴스 경제부 기자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한정택 KDI 원장

편집인
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김영과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편집주간
김동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윤태용 정책상황팀장
외교통상부 한동만 통상홍보기획관
과학기술부 김주한 종합기획과장
농림부 김남훈 행정범무팀장
산업자원부 이준태 법무행정팀장
정보통신부 김준상 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이상영 재정기획관
환경부 최희진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시민석 재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황성연 기획총괄팀장
해양수산부 류재형 정책기획팀장
기획예산처 박준섭 중기재정계획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김치걸 경쟁정책팀장
금융감독위원회 이명순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선민 총괄조정팀장
행정자치부 이희봉 재정정책팀장

편집간사
유수영 재정경제부 정책상황팀

편집장
이재열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공은주, 이정미, 이윤우, 길준범

배포업무
김경숙, 안현희

발행일
2007년 4월 1일 (매월 1회 발행)
제18권 4호 (통권 197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4

주소
(130-012)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 서울 청량리우체국 사서함 113

전화 02-958-4656, 465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기사문의 02-958-4667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18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인쇄 고려문화사 2277-1508~9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제지정 윤리경영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C · O · N · T · E · N · T · S

065

특별기획

‘공공기관법’, 공공기관 투명경영의 초석을 놓다

066 방만경영·낙하산인사 Bye Bye~ 김용진 기획예산처 정책총괄팀장

068 공공기관 대총대총? 이제는 옛말! 이후명 기획예산처 평가분석팀장

072 자율·책임 경영 유도해 나가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039

초점

외국인근로자, 우리 경제와 윈-윈 하려면

040 외국인근로자 고용 창구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이태희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장

044 고용허가제로 노동시장 안정 지켜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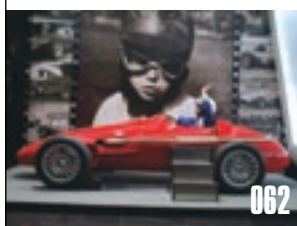
047



088



014



062

나라경제 시평

글로벌 포커스

경제정책해설

외신분석

해외시장 리포트

세계경제현황

국제기구 길라잡이

공무원과 기자

풀어보는 경제이야기

그건 이렇습니다

화보

영화 속 경제

건강

재테크

노래 칼럼

이색 박물관

102 어느 못내기 경제학자의 고민 이시욱 KDI 연구위원

093 대만 : ‘Green Silicon Island’를 향하여

조병구 KDI 연구위원, 김우종 KDI 연구원

050 유해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이민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장

054 해외진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해 드려요

이승재 산업자원부 통상협력정책과장

058 폐기물부담금 최대 20배 올려 이찬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085 한국정부 해외투자 확대 정책에 기대 반 우려 반

김진미 KDI 경제정보센터 책임전문원

047 에너지 대국 꿈꾸는 잉카의 후예, 페루 김종경 KOTRA 리마무역관장

078 기상재난의 시대, 환경과 경제 모두를 살리려면

남광희 駐OECD대표부

082 농업협상의 볼모된 NAMA 협상 타협점 모색 중

안창국 駐제네바대표부

086 국제기구 진출? 제2외국어는 기본 이호주 FAO 본부

053 건방진(?) 기자와 친해지기 김동률 KDI 연구위원

074 당신의 ‘행복지수’는 몇 점?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088 낡은 의료법 수술대에 오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014 카니발의 바다에 빠진 니스 최상운 사진작가

071 영화〈블러드 다이아몬드〉 박일한 파이낸셜뉴스 기자

061 꾸벅꾸벅 춘곤증엔 상큼한 봄나물을 박경호 박경호한의원장

090 예측불허 글로벌 금융시장 어떻게 봐야 하나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076 고복수의 ‘사막의 한’ 이도순 영남대 교수

062 삼성교통박물관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이제는 잊혀진 풍경, 피난시절 어린이



1954년 대구. 동인동 피난민촌 어린이들이 그릇을 들고 우유를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곤궁한 시절이었지만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망울은 맑다. (자료제공 : 대구매일신문)

전 쟁의 최대 피해자 어린이. 어린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을 잃고, 배움의 터전을 잃고, 또 그렇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키 크고 눈 파란 아저씨가 던져주는 초콜릿을 받아도, 이들이 들이대는 카메라를 보고도 마냥 해맑기만 했던 피난민촌 어린이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은 20년 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패스트푸드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좋아하고 만화를 즐겨보는 요즘 어린이들과 시대적 정서는 다르겠으나 그 맑은 동심은 같지 않을까? ■

글 ·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글 이 울 연합뉴스 경제부 기자
사진 길준범 나라경제 기자



'이루리라! 활력 넘치는 수산'
수산자원호 선장의 꿈

김춘선 국장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강준석 과장

생명의 보고 바다,
그 바다에 꿈과 맘을 쏟다.

최완현 과장

나는 海女다! 해양수산부에서
무엇이든 해내는 女자다.

황현애 주무관

우리는 한어어업
협정 드림팀

하두식 사무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해양수산부 청사 주변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은 전어를 양식하던 어민들이었다. 자연산 전어도 풍어고, 양식 전어 생산량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어값이 공급과잉으로 폭락하자 전어 양식어민들은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 자리 잡은 뒤 “정부가 불법 남획 전어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아 전어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양식 전어를 수매

해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어가격 폭락으로 어민들은 종묘 구입비와 사료비 등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해 엄청난 적자를 봐야 했고 수온이 내려가면서 팔리지 않은 전어들은 양식장에서 폐죽음을 당했다. 어민들은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에 이르기까지 집회를 계속했고 일인시위와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값이 폭락한 전어를 톤 단위로 청사 앞에 쏟

아붓기도 했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어민들의 호소는 3월 13일에야 일단락됐다. 정부가 어민대표들과 협상에 협상을 거듭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죽은 전어를 1kg 당 600원에 수매기로 한 결과다.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전어 문제를 일단락시킨 곳은 바로 일선 어민들의 호소와 불만을 가장 먼저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내 ‘어업현장 1번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은

풍요로운 바다를 가꾼다



최경삼 사무관



불법어선은 꼼짝마!
나는 바다지킴이다!

노병환 과장



미씨 화이팅!

손서연 주무관



자율관리어업은 어촌의 희망!

이영직 사무관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바다!
나는 바다를 ♥한다

최광규 주무관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를 조정·운영하는 부서다. 허가되지 않은 어업행위 단속, 분쟁조정, 영해를 맞대고 있는 일본·중국과의 어업협상, 수산자원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하는 바다환경관리 등이 모두 어업자원국 담당이다.

낮이나 밤이나 어민들과 얼굴을 맞대는 부서이다 보니 어업자원국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정부의 새로운 조치나 다른 어민과의 분쟁 등으로 화가 나 청사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 온 어민들에게 설명이나 설득을 하다 보면 밤이 오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전국의 어촌을 돌아다니며 어민들과 만나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어려운 사정이나 답답한 일에 대해 듣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한 뒤의 보람은 그

어느 것에 비길 수 없다.

어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바다에서 마음껏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끝에 성과도 거두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계속 줄어들던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 결과 2006년 어업생산량은 110만9천t으로 2005년보다 1만2천t 늘어났다.

어민들과 얼굴을 맞댈 일이 가장

많은 치열한 어업현장 1번지이다 보니 어업자원국의 수장은 대체로 엄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춘선 어업자원국장은 이 같은 상식을 뒤엎었다. 행정고시 21회인 김국장은 1978년 동력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행정의 달인’으로 상사로서의 권위나 위계질서를 앞세우는 일이 없다.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직원들이 야근으로 지쳐있을 때는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는다. 업무능력이 뛰어난데다 합리적이라 ‘일할 때 힘이 나게 하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국장은 “어업자원국의 핵심목표는 바다의 자원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어업활동을 하는 배의 수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끼를 방류하거나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해중림이나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등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어업자원국의 조직은 어업정책과·어업교섭과·어업지도과·양식개발과·자원관리과 등 5개 과와 수산자원회복팀·낚시관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총 61명이다.

어업정책과는 어민들이 연근해에서 마음 놓고 어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의 입안이나 조정·운행을 총괄하며 어민들 간 조업분쟁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업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부서다. 올해는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어선 2천여 척과 근해어선 70여 척을 감척하고 연근해와 연안의 어업허가 정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낚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정

Mini Interview 김춘선 어업자원국장



Q 어업자원국은 어민들을 직접 상대로 하는 대민부서다. 그래서 힘든 점도 많겠지만, 보람도 있을 텐데.

A 어민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민들이 수산업·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나는 어민들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수산업은 산업으로서 설 땅이 없고 GDP 대비 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작은 것을 하더라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대책일 경우 굉장히 고마워한다.

Q 어민들을 대하는 비결이 있다면?

A 우선은 어민들의 이야기를 솔도 한 잔 하면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민들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어민들의 요구가 정부로서는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한 것이다. 마음을 헤아리면 열 가지 요구사항 중 반 개만 이뤄져도 고마워한다. 수매를 더 한다든지 기술을 보급해 폐사를 줄인든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Q 對 어민정책에서 최근 달라진 점은?

A 옛날에는 정부가 어민들과 어장을 법규나 규제를 통해 관리해 나갔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어민들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스스로와 어장을 관리해 나가는 게 큰 흐름이다. 자율관리어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자율관리어업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어민들이 스스로 느껴서 자기 어장을 관리하고 치어는 잡지 않고 해야지, 백악이 필요 없다. 정부는 뒤에서 부추기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책을 마련하고자 낚시관리팀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58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낚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낚으로 만든 낚시추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영국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에서 근무한 강준석 어업정책과장은 “수산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 어민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구나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모든 것을 잃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이나 정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어업교섭과(과장 공석)는 우리나라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일본·중국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상대국의 EEZ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의 조업을 위한 조건과 절차 등을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북아 수역의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찾아내는 게 주 임무다. 어업교섭과는 일본·중국과 조업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푸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업지도과는 어선들이 법이나 제도를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EEZ에 들어오는 일본·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도 담당한다. 총 33척인 국가 어업지도선의 운항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도 막고 있다.

어업지도과는 지난해 '고데구리'라고 하는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일제 단속해 모두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데구리는 그물로 연안의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서 어패류를 잡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 고기를 잡는 등 자원을 남획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

1979년 수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수산정책 전반을 섭렵해 현장과 사무에 모두 강한 베테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병환 어업지도과장은 “지난해 정리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단속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안 하는 척하다가 다시 조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식개발과는 전국 양식장 13만여 ha에서 위성적으로 어패류·해조류 등이 키워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제도운영·조정을 하는 부서다. 잡는 어업과 구분되는, 기르는 어업의 중

요성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실제로 지난해에는 양식된 어패류·해조류 등의 생산량이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 생산량을 넘어섰다.

전국 16개 주요 포구 현장을 모두 직접 찾아 나섰을 정도로 현장을 중시하는 ‘젊은 리더’ 최완현 양식개발과장은 “과거에는 무조건 증산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질과 안전도를 높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면



서 “안전하고 질 높은 수산물이 양식될 수 있도록 양식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원관리과는 우리나라 연근해와 내수면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관리라고 함은 연안해역에 인공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을 만들어 원래 있는 수산자원이 잘 크게 돕고, 모자란 어종은 새끼를 방류하는 것을 말한다.

또 고등어 등 9개 어종의 경우 1년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남획을 방지하고 있다. 어민들이 스

스로 자원 남획을 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어업도 지원하고 있다.

역시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소신파’ 김성범 자원관리과장은 “올해는 자율관리어업을 내실화·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구성한 어촌계의 수는 만족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속

을 챙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수산자원회복팀은 2015년까지 1980년대 초반의 수산자원량 1천만과 1990년대 중반 어획량 150만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원량과 어획량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원국이 어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모두 따뜻하게 꺼안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양부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선비

이호철 부산지방조달청장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죠”

도 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책은 몇 권이나 쓰셨는지? 바쁜 직장생활에 책 한 권 읽기도 어려운데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하지만 여기, 야근을 밥먹듯 한다는 중앙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도 7권의 책을 낸 사람이 있다.

질문 둘. 지금껏 자신의 이름으로 연 그림 전시회는 있으신지? 역시 퐁퐁지 같은 질문 되겠다. 기자의 경우도 달 지난 캘린더를 넘기다 그림을 잠시 훑어본 기억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 공무원, 유희전 사회에 이어 서예 개인전까지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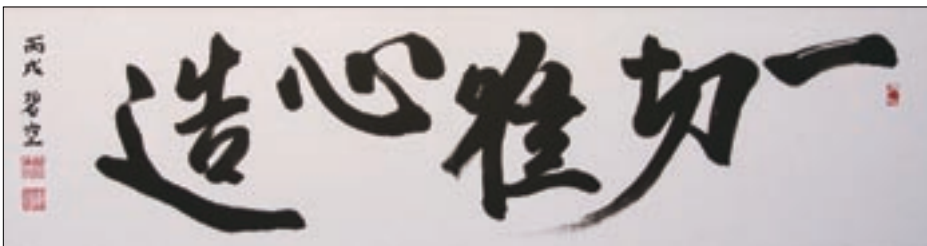
질문 셋. 그러면 혹 개인적으로 다룰 줄 아는 악기는 있으신지? 통기타나 하모니카 정도의 답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손을 놓은 지 오래되지 않으셨는지? 단소와 색소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직원들에게 틈틈이 이를 가르치고 있는 경제관료가 있다.

둘러메는 우산과 자동차 지붕 위 안테나

이호철 부산지방조달청장(57년생, 행시 23회)을 만난 첫 느낌은 '선비' 그 자체였다. 환한 얼굴에 조용조용한 말투, 꼴찌가 앉은 자세에 언뜻 뿔어나오는 안광까지...

작정하고 준비해 간 질문을 꺼냈다. “책 쓰고, 그림 그리고, 악기 연주하고,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이렇듯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난 87년 프랑스 유학 시절(참고로 그는 프랑스 팡테옹-소르본느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 의외의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도로를 달리는 자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스페이스 이누에서 열린 서예전 출품작

동차 지붕에 이상한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 라디오 안테나였습니다. 참 재미있던 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자동차 앞이나 뒤에 안테나가 있는데, 거기선 자동차 지붕 한가운데 머리카락 나듯이 달려 있던 말이죠. 또 하루는 비가 그친 뒤 거리를 걷는데, 파리시민들이 우산을 등에 둘러메고 다니는 겁니다. 우산 아래 위로 줄을 달아 마치 가방 메듯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산을 등에 매니 두 손이 자유로워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했죠. 왜 자동차 안테나는 꼭 앞이나 뒤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우산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어째서 지금껏 자연스러웠을까?”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의 타파. 그 순간 한국인 유학생의 머리에 떠오른 단어들이었다.

이 청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한국공무원, 시작은 참 좋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뽑히고, 그리고 나선 폭넓은 행정경험, 외국유학 등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결국엔 확실히 ‘관료’가 됩니다. 한 가지 길로만 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본은 공무원을 학자적 공무원, 정계 입문을 위한 정치가 그리고 장·차관 등 관료로 다양하게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 다양하고 창의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행동이 좀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듯 예들려 말하는 그는 천상 ‘선비’였다.

“국민에게 부자되는 방법 알려줘야”

이호철 부산지방조달청장은 지난 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재학 중 행사 23회에 합격한 뒤 재정부 기술정보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책조정총괄과장, 본부국장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이다. 재직 중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의 경제자문관을 지냈으며, 일본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에서도 근무한 국제통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는 지난 97년

의 IMF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저서 「IMF 시대에도 한국은 있다-한국 경제위기의 진단과 처방」으로 제10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7권의 저서 이외 각종 논문 및 강연 자료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



아내의 생일날 첫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표현한 '고골리꼬가 있는 정물'. 황금한 마음에 크리넥스 화장지 위에 그렸다.

이 청장은 기자에게 자신을 ‘이코노미스트’라고 소개했다.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는 것. 그러기에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다.

“즐겁게 살라. 그리고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즐거워야 남도 즐겁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국민은 고객입니다. 고객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들이 왜 불만을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이를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관료라면 국민들에게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행복에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물질적인 부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잘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관료는 시장의 흐름, 국제시장에서의 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부를 쌓은 것도 당시 정책 입안자들이 수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미혼의 독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 지금의 연인에게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또는 받고) 싶으신지?

배우자의 이름으로 칠언절구 한시(漢詩)를 지어 바치심은 어떨까 한다. 정성들여 한시를 짓고 이를 예서체로 소품을 만들어 선물해 보시라. 결과는? 단박에 결혼에 골인해 행복을 알콩달콩 엮어 온 이호철 청장을 보시라. 그리고 보면 이 청장은 선비가 아니라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가 아닐까? ■

글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사진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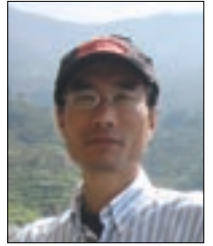
기자에게 자신의 작품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호철 청장



카니발의 바다에 빠진 니스

매년 2월 남불의 동쪽인 꼬뜨 다쥐르 지방의 중심도시 니스에서는 떠들썩한 카니발이 열린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과 더불어 세계 3대 카니발로 불리는 니스 카니발을 찾아 축제의 마지막 날 니스를 찾았다. 니스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인 프롬나드 데 장글레(영국인의 산책로)와 붙은 해안에는 이른 봄인데도 벌써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 잠시나마 눈을 의심하게도 한다. 아마 니스의 토박이로 이곳의 태양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의 프롬나드 데 장글레는 산책과 뒤편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한산하다. 약간은 이상한 이름인 '영국인의 산책로'는 1820년에 영국인이 이 산책로 공사의 재정을 뒷받침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카니발은 이 프롬나드 장글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카니발 역사는 1294년에 프로방스 지방 양주의 백작 샤를르가 여기서 카니발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어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3년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카니발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카니발의 왕이라고 일컫는 큰 인형이 먼저



최/상/운

66년생, 한양대 법학과, 중앙대 사진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각종 잡지와 사보에 여행다큐멘터리 칼럼 자유기고,
 goodluckchoi@naver.com

인형들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인형들이 인류의 역사를 표현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과 미학을 담고 있는 것임을 안다면 조금은 쉽게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카니발은 오후에는 꽃 퍼레이드, 카니발 퍼레이드가 열리고 밤에는 빛의 축제가 열리는데 꽃 퍼레이드는 수십 대의 꽃마차가 지나면서 관객들에게 꽃을 던져주고 그 뒤를 악단과 각국의 민속무용단이 뒤를 따르는 행사이고, 빛의 퍼레이드는 15만 개나 되는 전구가 밤을 밝히는 가운데 인형들의 행진과 거리극단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 마지막 날에는 카니발 기간 동안의 참가자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펼치는 약 2.5km의 '그랑 파라드'가 있고 밤에는 카니발의 제왕 인형을 바닷가에서 태우는 모의 화형식이 펼쳐진다. 보통 화, 목, 토, 일 4일 동안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날그날 퍼레이드의 내용이 다르므로 미리 카니발 홈페이지(<http://www.nicecarnaval.com/>) 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입장권이 필요한 날도 있고 관람석을 예매할 수도 있는데 조금 편하게 전망이 좋은 곳에서 보고 싶다면 좌석을 미리 예매하는 것이 좋고 조금 더 생생하게 카니발을 즐기고 싶다면 그냥 길

1. 마차에 탄 소녀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쓰기도 한다.
2. 축구로 유명한 나라답게 축구선수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한 거대한 인형

길을 트고 그 뒤로 각양각색의 거대한 인형과 마차들, 길거리 공연단, 악단들이 줄을 잇는다.

원래 카니발은 부활절 40일 전인 사순절의 금욕 기간 동안 술과 고기를 먹지 못하므로 그 전에 실컷 즐겨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는데, 민중들이 지배층을 조롱하고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통로가 되었고, 초기에는 종교적 색채가 강했지만 차츰 세속화되어 현재는 종교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중에서 니스 카니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매년 새로 정해지는 카니발의 왕을 비롯한 갖가지 거대한



거리에서 서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니스의 카니발을 보러 니스를 방문하는데 카니발 중에는 관객들도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옷들과 분장을 하기도 하고 스프레이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지나가는 행렬과 사람들에게 쏘아대고 색종이를 뿌리기도 하며 흥에 겨워 행렬에 참가해서 춤을 추기도 한다. 한 번쯤 아주 떠들썩하고 야단스러운 카니발의 물결 속으로 빠져보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은 경험이 된다. ■

▶▶▶ 여행정보

파리 드골 공항에 내려서 니스 행 열차를 타거나 드골 공항에서 니스 행 비행기로 갈아타면 니스에 갈 수 있다. 카니발 기간 중에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은 조금 쌀쌀하므로 밖에서 카니발을 즐기려면 두툼한 옷도 하나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시간이 난다면 사갈미술관, 마티스미술관도 한 번 둘러볼 만하다.

1. 카니발 중에는 거대한 인형을 머리에 인 사람들의 행렬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2. 구경하는 아이들도 마음껏 축제를 즐기려고 여러 가지 예쁜 옷들을 차려입고 나왔다.
3. 축제행렬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4. 거대한 눈 모양을 한 인형들이 프롬나드 데 장글레를 지나고 있다.
5. 카니발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 스프레이로 실을 쏘아대며 즐기고 있다.
6. 귀여운 옷을 입고 나온 예쁜 아이도 카니발이 그저 신기한가 보다.



1



2



3



4



5



6

10년 불황 이겨낸

日本

그 원동력은?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가 1960년대 후반의 고도성장기(이어나기 경기·회복기 57개월)를 뛰어 넘는 전후 최장의 경기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일찍이 영국의 유력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확 바꾼 일본식 구조조정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나라경제』는 일본경제의 과거와 현재, 경제 부활을 위한 정부·기업 등 각 부문의 노력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를 되돌아본다. <편집자註>

점진적 구조개혁 통해 장기불황 탈출

일본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구조개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려는 조그만 변화들이 축적되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듯이 보였던 일본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jung@kiep.go.kr)

- 서울대 경제학과
- 日 히토쓰바시(一橋)대 경제학 박사

최 근 일본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1990년대 두 차례 있었던 단기적인 반짝경기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의 확산이

있다.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향후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 수 없으나, 2002년 2월 이후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일본경제 내부에서 구조적인 변혁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경제의 내부에서 지난 10여년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인 변혁이 현재의 경기회복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 것일까? 지금의 회복세가 향후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日, 사상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

이번 일본의 경기회복 국면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점을 명확히 이

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회복기간이 대단히 길다는 점이다. 일본의 내각부는 경기동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의 저점과 정점을 판단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내각부는 아직도 일본의 경기가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기확대기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06년 11월에 전후 최장의 경기확장기였던 이자나기(いざなぎ) 경기(1965년 10월~1970년 7월)의 57개월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의 활동성을 보면 이자나기 경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이번 경기회복 국면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자나기 경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10%였으나 이번 확장 국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자나기 경기는 일본의 실질 GDP를 약 1.7배 증가시켰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겨우 1.1배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경기판단기준이 경제활동의 수준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면 경기확대기로 판단된다. 일본경제가 너무나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탓에 경기호전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의 회복 국면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것 또한 오류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회복 국면은 199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단기적인 회복 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세 번째 특징이다. 1990년대의 경기회복이 주로 공공투자 등 경기대책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면 지금의 경기회복은 민간수요에 의한 자율적 회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이 시기에 공공투자는 오히려 감소해 왔다. 또한 기업 부문에서는 버블시대의 유산인 이른바 '3대 과잉'을 해소함으로써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3대 과잉이란 고용·설비·부채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정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2005년을 전후로 일본기업들은 3대 과잉을 거의 해소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공공 부문 줄이고 기업조직을 개편

결국 이번의 회복 국면은 활동성은 매우 미약하지만 1990년대의 회복 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 회복 국면이



지난 2002년 2월 시작된 일본의 경기확대기는 이미 2006년 11월에 종전 후 최장의 경기확장기였던 이자나기 경기(1965년 10월~1970년 7월)의 57개월을 추월하였다. 사진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07년 증권시장 개장식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본경제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라고 정리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를 호전시킨 요인들로서는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를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수요보다는 민간수요가 경기회복을 견인해 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 기여도를 수요항목별로 보면 공적고정자본은 2000년 이후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수출과 민간설비투자가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민간소비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비회복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지금의 경기회복을 견인한 수요요인은 초기 단

계에서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의 수출증가였으나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높인 기업들의 투자증가가 이를 더욱 보완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수익성 회복이 가계의 고용조건의 회복과 임금상승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편 수요 측면과 더불어 공급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히려 수요 측면보다도 공급 측면의 변화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장기불황의 근본적 원인이 단순한 수요부족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저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필자는 공급요인을 중시하는 주장이 더

욱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 측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이른바 구조개혁이 지금의 경기회복을 가져온 보다 중요한 요인이며, 이번의 경기회복을 이전의 반짝경기와 구분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공급 측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정부의 정책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점에 모아지게 된다. 일본정부 그리고 일본기업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이후의 글들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총론적인 논의에 그치기로 한다.

먼저 2000년대 이후의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투자 등 경기대책을 통해서도 경기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10년간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특히 고이즈미 정부는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일본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천명하면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리고 구조개혁정책의 핵심은 공공 부문의 축소와 기업조직재편의 촉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메커니즘도 확립하였다. 그 핵심은 자민당과 관료에게 분산되어 있던 권력을 총리에게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집중된 권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스템이 고이즈미 정부 시절에 나름대로 정립되었던 것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사회 비효율성 제거 노력 필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극적인 경제적 충격을 받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구조개혁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조그만 변화들이 오랜 기간 동안 축



일본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장기불황을 극복해 왔지만 개혁의 모멘텀 유지, 양극화 대처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주쿠 경제구의 마천루와 함께 우뚝 솟아 있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

적되면서 경제·사회의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듯이 보였던 일본이 어느 순간에 상당히 변화된 면모를 세상에 내보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과정이다.

이처럼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장기불황을 극복해 왔지만 일본경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많은 개혁과제들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를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격차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청년층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청년층 소득 격차의 확대 등에 대해 아베 정부는 ‘재도전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격차확대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고령화나 세대구성의 변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이 매우 크지만 또 하나는 기업이 과잉고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격적인 소비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구조개혁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급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순히 수요를 진작시키는 총수요관리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1990년대의 일본경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잠재성장

률이 하락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재정자금을 동원하여 공공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이 방법이 그리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정부재정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정책보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효율적 낭비를 청산하는 작업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공공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가장 많은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총리 관저를 떠나며 박수를 받고 있는 고이즈미 前일본총리. 그의 개혁정책은 일본경제 부활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후퇴 없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일본경제 부활의 원동력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정부는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며 지방 자립·활성화에 초점을 둔 지속적인 개혁 정책은 일본경제 회생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정태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taehunjung@gmail.com)
• 서울대 경제학과
• 日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필 자는 일본 유학시절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연일 외쳐대는 '구조개혁 없이 경기회복은 없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반대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들은 정부는 구조개혁 운운하지 말고 지금 코앞에 닥친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수요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2002년부터 일본의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현시점까지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회복세가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그렇게 외쳐왔던 구조개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정국 민영화 등 군살 빼는데 주력

고이즈미 정부 구조개혁의 시작은 2001년 6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제출된 '경제재정운영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이라는 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이 보고서는 개혁의 진척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조금씩 수정·확대해 가면서 현재까지 매년 공표되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개혁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정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세출과 세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재정재건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역을 두지 않는 전면적인 세출구조개혁을 통한 불필요한 세출의 삭감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라고 외치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라고 외치며 정책의 취사선택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하여 공공사업 및 특수법인의 개혁과 우정국 민영화 등을, 지방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금, 세원이양을 하나의 패키지로서 서로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개편하는 삼위일체의 개혁을 제시하였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왔고, 이러한 축소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효율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투자를 없애기 위하여 사업별 예산 배분의 정비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공공사업예산은 경기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던 1990년

도 수준으로까지 하락했고, 사업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도로 부문이 감소되고 도시정비 부문이 확대되는 등 재정비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역할의 중요성이 미미해진 특수법인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수법인은 폐지·민영화·독립행정법인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개편을 통해 축소되었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출도 자연스럽게 삭감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고이즈미 정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국 민영화의 과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우정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편사업이나 택배사업, 우편저금이나 보험 등의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 더욱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13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정국에 대해 민영화라는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많은 여·야당 의원들은 우정국의 민영화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국들이 제공해 왔던 공적 서비스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일 매스컴에서 우정국 민영화의 부적절함을 주장하던 자민당의 한 의원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러한 와중에 우정국 민영화 법안은 2005년에 참의원에서 부결되었고 이는 곧 국회의 해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총선거에서 우정국 민영화 찬성파가 압승을 거둠으로써 우정국 민영화 법안은 통과되었다. 이제는 우정국 민영화의 기본방침은 정해졌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삼위일체식 개혁은 2004년 정부와 여당의 합의에 의하여 공식화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정부에 지불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약 4.7조엔, 지방교부금을 5.1조엔 삭감하고, 3조원 가량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한 후 현재까지 조금씩 개혁 작업을 진척해오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 및 관료의 반발, 도시와 지방 간의 대립 등 아직도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의 자립 및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 외에도 많은 개혁 내용이 있다.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양산해 온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개혁,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와 의료제도의 개혁, 중앙정부의 조직 및 인원 삭감 등의 행정개혁,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개혁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구조개혁도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하여 매년 착실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거침없는 구조개혁 국민신뢰 얻어

최근 일본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의 근저에는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구조개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1년 자민당의 지지가 아닌 국민으로부터의 인기를 등에 업고 탄생한 고이즈미 정부는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당시의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불황의 나락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믿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많은 실무가들과 경제학자들에게도 비난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정부의 재정정책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었다.

1990년부터 경기대책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해 오다가 1997년 하시모토 정부는 재정적자 삭감을 목표로 하는 재정재건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대량의 국채발행을 실시하는 등 다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재정정책의 방향 변경은 경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의 일관성마저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과도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이즈미 정부는 달랐다. 불황의 늪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단기적인 경기대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경제



고이즈미

고이즈미 정부는 거침없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반신반의하는 국민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도쿄의 긴자 쇼핑가

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즉, 공급측면에서의 개혁이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두고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총리 주도로 바꾸었다. 그리고 매년 보고서를 통하여 목표 및 성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비전까지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일정을 명기한 공정표까지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게다가 고이즈미 총리가 외치는 말은 간단했고 알기 쉬웠다. 반대파들이 보면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나 싶을 정도로 간단했지만 아직도 필자의 뇌리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임팩트는 아주 컸다.

무엇보다도 고이즈미 정부가 영리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구조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은행에 대한 견제였다. 일본은행은 2000년 8월에 1년 반 동안 실시해 오던 제로금리를 해제하였다가 경기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자, 2001년 3월에 실질적인 제로금리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2006년 3월 양적완화정책을 해제하는

시점까지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기초를 유지하였는데, 양적완화정책을 해제하기 전에 일본은행은 자주 양적완화정책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 때마다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였다. 소위 '우리는 너희가 지난 2000년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는 식의 질타와 함께 정부는 경기회복을 시야에 두면서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국민에게 보냈다.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경기대책은 일본은행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조개혁을 정부가 하나씩 실현해 나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일관된 구조개혁은 국민들에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고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시장을 정부 편으로 만든 것이었다. 옛날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본다고 믿었지만, 지금 같이 정보가 발달되고 시장의 기대가 중요한 시대에는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로지 시장을 자기편으로 만

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개혁 초기에 민간경제가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재량적인 형태의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이즈미 정부는 거침없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반신반의하는 국민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는 최근의 각종 통계치가 대변해 주고 있다.

이제 일본은 '새로운 도전의 10년'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사회의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그 말은 일본 정부도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도 구조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무수히 가로막고 있지만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에 성공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회복세가 계속될 것 같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 생산혁신 통해 기업체질 튼튼히

생산혁신에 의한 체질강화가 일본 국내공장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 나아가 국내공장에서의 생산혁신은 해외공장으로 전개되어 해외공장 전체의 능력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오재현

日 동경대
제조경영연구센터 교수
(ogaw@mimrc.e.u-tokyo.ac.jp)
· 서울대 경제학과
· 日 동경대 경제학 박사

최 근 일본기업의 호조가 주목되고 있다. 90년 이후의 장기불황 속에서 침체 상태에 있던 일본의 제조기업은 2000년대 초에 회복세로 돌아서고 2004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19조억5천억엔)을 거두었다. 이것

은 디지털 가전, 자동차 수출, 중국 특수 등의 요인에 견인된 것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생산혁신을 통한 기업체질의 강화와 사업구조의 전환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불황기에 생산혁신 활발했던 일본기업

90년대에 일본기업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기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등의 주요 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첫 번째 요인은 물론 국내시장의 축소이다. 국내시장의 축소는 직접적으로는 버블경제 이후의 경기침체에 의한 것이지만 인구감소, 특히 장래의 소비 창출의 주역인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순환적인 현상만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엔고로 대표되는 경제적 환경의 격변이다. 급격한 엔고 현상은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일본기업에 무엇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 이어 중국이 국제적인 생산거점으로 등장하면서 일본기업은 여러 제품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네 번째는 디지털화에 따른 제품 아키텍처의 급격한 변화이다. 제품 아키텍처의 변화는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 현저히 나타나 일본의 2대 산업 중의 하나인 전기전자산업은 장기에 걸쳐 침체의 심연에 빠졌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하겠다.

위와 같은 복합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초래된 불황은 당연하지만 여러 측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첫 번째의 직접적인 대응은 물론 생산조정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91년 피크 시 1,335만대였던 일본 국내 생산량이 90년대에 1,000만대 이하로 감소하였다. 350만대분의 생산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장폐쇄와 생산라인의 통합 등이 고통스럽게 이루어졌다.

전기전자산업의 상황은 보다 심각했다. 정년퇴직자의 증가나 신규채용의 억제 등을 통해 비교적 완만한 구조조정을 겪은 자동차산업에 비해 전기전자산업은 희망퇴직자의 모집 등 단기간에 대규모의 인원조정을 실시했다. 국내수요의 감소만이 아니고 가격경쟁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많은 제품을 급속히 해외생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러한 구조조



정보보다도 90년대에 걸쳐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생산혁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자동차공장의 경우에는 '로(low) 코스트-하이(high) 플렉시블(flexible)' 생산설비가 도입되고 생산라인에 있어서의 부품물류 혁신이 이루어졌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도요타의 글로벌 플렉시블 라인(GBL; Global Body Line)이다. 이 라인은 종래보다 훨씬 적은 설비투자로도 4차종 혼류에서 최대 8차종까지 혼류생산이 가능하다.

전기전자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셀 생산방식이 광범히 도입된 점이다. 이 셀 생산방식은 도요타의 생산방식을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에 적용한 것으로서, 소니의 생산현장에 최초로 도입되어 캐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종래의 컨베이어 라인을 대체한 셀(cell) 생산방식은, 몇 명의 작업자가 팀을 형성하여 하나의 제품을 완성 조립하기 때문에 제품의 교체나 생산량의 변동에 새로운 설비투자 없이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셀 생산은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시장변동이 심한 전기전자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생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

장기불황기간 동안 일본에서는 공장폐쇄, 생산라인의 통합 등이 고스톱스럽게 이뤄졌다. 사진은 1999년 당시 구조조정에 돌입한 닛산의 도쿄 공장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

물론 일본의 공장에서는 생산현장의 작업자들에 의한 작은 개선도 끊임 없이 이루어진다. 후지츠의 PC생산공장에서는 셀 생산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작업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서 5년 동안에 동일한 생산인원으로 6배의 생산량의 증가를 달성했다고 한다.

현지생산과 국내생산을 동시에 늘려

이러한 일본공장의 치열한 생산성 향상 노력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일본기업은 자사 내 공장 간 벤치마크를 실시하여 경쟁을 시키고 있다. 국내공장이 해외공장에 비해 경쟁력 지표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국내생산의 해외생산으로의 전환을 가속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국내생산이 해외생산으로 대체되고 국내공장이 다른 제품이나 사업으로 구조를 전환하지 못하면 국내제조업의 공동화가 초래된다. 실제 90년대 일본 국내에서도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생산의

감소는 국내수요의 축소에 의한 부분이 가장 크고 해외생산 대체로 인한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90년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생산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90년의 6.0%에서 2002년의 17.0%로 상승하였는데, 해외진출기업에 한정시킨 해외생산비율은 90년 16.7%에서 02년 41.0%로 급격히 커졌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생산량이 국내생산량에 거의 육박했고, 올해는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역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최근에는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과 이들 부품이나 소재의 해외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생산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의 일본경제의 회복은 국내수요의 증가보다는 해외수출의 증가에 더 의존한 것이다. 요컨대 국내생산과 수출, 해외생산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생산의 확대 속에서 수출의 늘어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해외공장의 생산증장 스피드가 해외수요의 증가에 따라가지 못해 이 부족분을

국내생산의 증가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둘째 요인은 일본기업이 제품의 국제적인 분업전략을 수정하여 특정제품의 국내생산을 증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흔히 '국내회귀'로 일컬어지는 현상인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샤프의 가메야마 공장이 이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국제적인 생산공정분업이나 수직분업의 진전에 의한 효과이다. 주로 부품이나 소재 등의 수출증대가 이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제품별로 수출확대의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일본공장의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생산혁신에 의한 체질강화가 일본 국내공장의 경쟁력 유지의 주요 요인이다. 더 나아가 국내공장에서의 생산혁신은 해외공장으로도 전개되어 해외공장 전체의 능력 향상을 견인하고 있다. 국내공장이 글로벌 생산의 혁신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제품에서 일본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과거에 일본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제품 중의 일부는 모듈화로 불리는 제품 아키텍처의 변화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면 일본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한 유효한 분석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것이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품아키텍처론이다.

제품아키텍처란 간단히 말하면 제품의 기본설계사상이다. 제품을 설계할 때 설계자는 제품의 각 기능을 하부시스템, 즉 부품으로 분할하여 각 부품을 어떻게 연결하여 전체 기능을 실현할 것인가를 구상한다. 제품의 요구기능이나 복잡도에 따라 기능/부품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의 경우 설계과정에서 각 부품 간의 빈번한 상호조정을 해야만 전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제품을 인테그럴(조율형) 아키텍처라고 부른다. 이와 반대로 기능/부품 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여 부품 간의 인터페이스(연결방식)를 표준화하기 쉽고 따라서 부품의 설계를 비교적 독립



90년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생산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소재·부품 수출 등으로 인해 일본 국내의 생산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07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사프전자 부스

적으로 수행하여 이후에 조립해도 전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은 모듈러(조립형) 아키텍처라 부른다. 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은 승용차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PC이다.

팀워크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조직특성을 갖고 있는 일본의 제조기업은 대체로 인테그럴 아키텍처의 제품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세밀한 분업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조직특성을 갖는 미국기업은 대체로 모듈러 아키텍처 제품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90년대의 장기불황기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중첩됨에 따라 이 시기에 많은 인테그럴 아키텍처 제품이 모듈러 아키텍처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디지털화가 현저히 진전된 전기전자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80년대에 일본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많은 전기전자제품이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에 추월당하는 사태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전기

전자기업은 공장의 생산혁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 즉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전략적 과제에 직면했던 것이다.

일본기업은 엔진은 강력하지만 핸들은 잘 듣지 않는 자동차로 비유되기도 한다. 생산현장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사업의 포지셔닝(위치선정) 등의 경영전략은 서툴다는 의미이다. 최적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영자원의 물갈이(퇴출과 영입)가 필요한데 장기고용과 종업원의 팀워크를 중시하는 일본기업에서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위스키 브랜드로 독보적인 존재였던 산토리가 80년대에 위스키시장의 축소에 직면하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의 성향도 까다로운 청량음료와 맥주 분야로 사업의 주축을 전환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90년대에 일본의 전기전자기업은 제품아키텍처의 격변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사업구조의 전환을 꾀해 왔다. 대만이나 한국 또는 중국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모듈러 아키텍처 제품분야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분야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제휴전략 등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면서 자신은 인테그럴 아키텍처의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종래의 일본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든지 생산해서 수출한다고 하는 막연한 전략관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 90년대의 장기불황과 제품 특성의 변화 그리고 한국, 대만, 중국 등에서의 라이벌기업 등장으로 인해 일본기업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일본기업인이 쓴 불황탈출기

“돈만 생기면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일본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장기불황하에서도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연구자, 특허출원 등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했다. 도요타는 1조엔의 이익이 창출되어도 임금인상보다 R&D 투자 우선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노사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카스기 노부야
(高杉暢也)

한국후지제록스(주)
최고고문

-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 한국후지제록스(주) 대표이사 회장

지난 1980년 대 후반, 엔고(円高)에 따른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생겨나고, 결국 거품 붕괴와 자산가치 하락이 일어

났으며 실물경제는 위축되어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고실업률 등의 악순환(Deflationary spiral)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기침체가 계속됐다.

일본정부는 약 100조엔 규모의 공공투자 및 중소기업대책을 실시했지만 공공투자 주도로는 경기회복이 불가능했고 역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했다. 드디어 2002년 이후, 정부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개혁형 경기회복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복 당초는 중국·미국 등 수출 중심의 외수가 주도했고, 그 후는 내수, 특히, 민간소비와 민간설비투자가 견인했으며, 기업은 고용·설비·채무의 세 가지 과잉을 해소하여 호조를 지속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된다.

그럼 일본은 10년간의 불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한국에 부임해서 한국후지제

록스(주)의 재건에 힘쓴 경험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의 경영마인드를 비교하면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불황 속에도 기업R&D투자 지속적으로 늘려

1990년대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보더레스화(Borderless)의 흐름을 가속화했다. 당시 일본은 ‘CAD’, 즉 C(China), A(America), D(Digital)에 직면했다. 중국의 높은 성장성, 거대한 시장, 낮은 생산비는 일본기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설비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코스트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만들었지만 일본 국내는 산업공동화가 초래되었다.

미국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일본과 경쟁을 하는 한편 일본제품, 특히 자동차·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수입국으로 좋은 파트너였고, 일본경제를 지지했다.

세계의 기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왕성한 R&D투자는 인(人), 물(物), 금(金)을 디지털 기술에 집중시

키고, 디지털 기술국가를 구축하고 있다. 경제환경에 관해 말하자면 한·일 양국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영스타일은 그 국가의 민족성, 문화에 기반하는 것으로 내가 느끼는 한·일 양국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한국과 일본은 ‘제조(物作り)가 가능한 나라이다. 제조를 위해서는 ‘R&D와 생산의 일체화’가 요구된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점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강점의 활용에 있어서는 양국에 큰 차

〈표〉미국·일본·한국의 과학기술력 비교

	단위	미국	일본	한국
연구개발비(GDP 대비)	억달러(%)	2,472(2.84)	1,320(3.04)	122(2.68)
연구자 수(인구만명당)	천명	1,114(41)	643(52)	160(34)
특허출원건 수	천건	263	437	122
기술무역수지(수출/수입)	배(倍)	3.26	1.13	0.07
노벨상 수상자 수(자연과학)	명	204	19	0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수석원장

현금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DCA(Plan-Do-Check-Act의 관리사이클)에 의한 개선활동(TQM기법)이라는 세세한 과학적 목표관리경영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기업은 매출증가와 기업규모의 확대를 경영목표로 두고, 개선보다 개혁에 중점을 두며, 감정과 감(感)에 의한 경영이 자주 드러난다.

일본의 개선활동은 현장·현물·현실이라는 '3현(現)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영자부터 말단사원까지 방침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영자 스스로 현장에 가서 현물을 확인하며, 데이터를 기본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

한국기업은 즉단즉결의 스피드는 있지만, TQM기법과 같은 극히 세세한 과학적 목표관리경영이 적으며 시행착오적 경영이 다수 보인다. 최

도요타자동차는 임금인상보다는 R&D 투자 우선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노사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도요타자동차 공장 내부

이가 보인다.

일본기업은 개발·생산 현장을 중시하는데, 한국기업은 기획·재무 부문을 중시한다. 일본의 산업구조 특징은 대기업(제조업)을 필두로 계열구조로 되어 있다. 1차 벤더, 2차 벤더(주로 중소기업)는 부품·소재의 Q(품질)·C(코스트) 개선을 철저히 요구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대기업은 벤더에 자금·기술·인재를 지원하고 있다. 즉, R&D와 생산의 일체화를 강화하는 구조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식 경영은 그 강점인 제조를 위해 장기불황하에서도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연구자, 특허출원 등에 대한 R&D 투자를 계속해 왔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나, 2003년 6월 28일 <KoreaTimes>는 스위스 IMD 자료를 인용하면, 노동생산성은 인구 2천만명 이상의 선진 30개국 중 1위는 일본(7.6)이고, 한국은 3.55로 최저(30위)라고 발표했다. 당

시의 다른 신문은, “최근 4년간의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2배”(〈조선일보〉), “지난해, 한국의 노동자 1천명당 쟁의 행위에 의한 노동손실일수는 일본·대만과 비교해 270배나 많다”(〈중앙일보〉)라고 보도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높은 노동배분율 요구를 위해 노동쟁의를 일으키며,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지만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1조엔의 이익이 창출되어도 임금인상보다는 R&D 투자 우선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노사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인간과 비슷한 집합체로 보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글로벌화, 소자화(少子化), 고령화 등으로 최근 변화가 보인다고는 하지만 운명공동체, 연공서열시스템은 기업에 대한 충성심, 기술 내부축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일본기업의 경영목표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이익·

근, 6시그마 등의 수법을 채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개선활동을 기초로 하는 일본식 경영은 긴 터널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변혁을 이끌어 내고 고용·설비·채무의 세 가지 과잉을 해소하여 일본경제를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향후 어디로 가야 하나...

한·일 FTA가 열쇠

일본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경제의 질이나 수준이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경제의 질과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아래의 세 가지 우선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성장력·경쟁력 강화 둘째,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셋째, 안전·안심의 확보와 유연하고 다양한 사회 실현이 그것이다. 특히 성장력·경쟁력 강화에서는 지역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IT와 서비스산업의 혁신으



주원영

일본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현장 중심의 경영 때문이다. 사진은 후지제록스의 프린터 신제품발표회

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지향하며, 더불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공생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로,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시점을 갖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목표를 명확히 해서 PDCA사이클을 착실히 실시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국가전략은 'Continuity', 'Consistency'와 'Accountability'가 요구된다. 한국의 '동북아시아 경제허브 구상'은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디까지 실현됐는지 명확치 않다.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공생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는 특히 민주주의·자본주의라는 공통의 체제를 갖는 한국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된다. 한국은 제품의 완성품이 만들어져도 그 내부의 소재·부품은 외국, 특히 일본에서 조달하는 산업구조인 만

큼, 중소기업의 육성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국에 있어 한·일 FTA의 조기 체결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일 양국은 산업구조가 비슷하다. 중간소득층이 많고, 교육수준도 높으며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는 등 공통점이 있다. 반면 양국에는 자금격차, 경제규모의 차, 기술력·품질력의 차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일본은 고령화·소자화 경향, 생산설비의 노후화 현상 그리고 소비감퇴와 디스플레이션으로 오랜 기간 계속된 경제침체로부터 겨우 벗어난 상태이다. 한국은 소비력이 높고 경쟁자극이 넘쳐나며, 성장활력이 풍부하다. 생산설비는 비교적 새롭고, 노동력 연령도 20년 정도 여유가 있다. 양국이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으로써 인구 1억7천만명, 경제규모로는 미국의 2/3에 필적하는 5조달러의 시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FTA 체결에 의해 일본은 한국이 갖고 있는 활력에 의해 일본의 국내개혁을 기대할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한국도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기술·지식 등의 교류가 비약적으로 활발해지게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이 기대되며, 한국 기업과 제품의 일본시장 침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양국은 기업 간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생기고, 더욱이 아시아 진출을 생각하는 서구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 해외투자(FDI)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1990년대에 미국이 재건경제 부흥을 이룬 큰 요인은 외자도입에 있었다고 한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면, 한·일 양국 모두 더욱 적극적인 외자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최대한 자원을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리며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적중하여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준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leejy@hufs.ac.kr)

- 서울대 경제학과
- 日 히토쓰바시대 경제학 박사

‘인 어버린 10
리 년’ 아니
등 ‘잃어버린
13년’이라 일컬을 정도로 장기불황에 시달려 온 일본경제가 2003년경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전후 최장기 호황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자나기(いざなぎ)정기를 경신할 정도로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호황을 결눈질하면서 아직도 IMF 관리체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일본경제의 일련의 흐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일본경제가 어떻게 10년 불황에서 벗어나 수 있었는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왜 그렇게 장기간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자본금 1엔으로 창업... 기업자들 크게 늘려

그 원인을 보면, 무엇보다 그들이 플라자합의에 따라 발생한 버블경제가 파괴되면서 시작된 1991년부터의 불황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종래까지의 관행대로 적자국채의 발행을 통해 토목공사 수요창출형 공공투자만으로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켜 버린

것이다. 요컨대 버블경제의 파괴에 따라 은행이 대량의 불량채권을 끌어안게 되어 은행의 체력이 급속히 약화됨으로써 은행이 제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방지한 채 오히려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공공투자에만 급급한 것이다.

또한 미·일 간 환율조정에 의해 엔저를 유도해 냄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자 채 정착되기도 전에 적자재정의 축소를 겨냥한 긴축정책 및 소비세의 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나아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일환으로 한국경제가 취약성을 보이자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자금을 빼감으로써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고 이것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의존관계에 있는 일본경제에 피드백(feed back)되어 일본은행의 불량화 및 일본의 대한 수출을 급락시킴으로써 일본정기를 더욱 침체시키게 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국제통상환경은 급변해왔다. 플라자합의, WTO체제의 출현, 주주자본주의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뉴이코노미(new economy)의 강력한 대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통상환경 변화는 그 성격상 일본경제의 주요한 특징인 은행과 제조업의 관계 및 종신고용, 연공서열제도 그리고 한계산업을 온존시키는 비관세장벽의 존재 등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각 경제주체는 이러한 환경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임시미봉적으로만 대처했기 때문에 불황이 장기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1년부터 시작되는 고이즈미(小泉)내각에서는 새로운 대응을 모색하게 된다.

경기불황의 극복은 물론 일본경제의 약화된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이즈미 내각 경제정책의 성격을 체계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당국은 환경만 조성하고 가능한 한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투자활동은 물론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한 입장의 일환으로 일본경제 전체로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물론 공공 부문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민간 부문에 맡기고, 공공 부문의 경영활동 과정에 민간기업의 경영방식 내지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규제완화

일본의 불황 탈출에는 규제완화에 힘입은 기업들의 투자·수출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사진은 일본의 한 신사에서 열린 기업의 시무식

살린다는 입장을 취했다. 말하자면 작은 정부의 구현 내지는 관료화의 최소화를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투자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환경조성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을 털어내 건전화시킴으로써 민간기업에의 자금지원이 원활해지도록 불량채권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갔다. 나아가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민간기업 자금대부자로서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유도했다. 일본의 민간은행들은 소유주체가 일본인일 뿐 아니라 산업자본과 상호출자 형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을 적극화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을 건강하고 강력하게 정비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민간기업들의 경영 부실화는 버블경기의 파괴과정에서 형성된 과잉설비, 과잉고용 및 과잉채무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경영 부실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약 부문의 경영자원을 털어버리고, 강한 부문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철수 및 설비폐기 등을 촉진하고, 혁신설비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세제를 정비하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조직재편성 그리고 재무건전화를 위한 감사 및 증자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셋째, 일본경제의 비교우위는 말할 필요

도 없이 기술집약산업에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공공투자 활동을, 종래의 토목공사 유발형을 지양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산·학·연의 연구부문을 네트워크화함과 동시에 3자 간 협력적 연구개발활동을 장려·촉진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기술집약산업에 관한 한 투자환경이 여타 국가에 비해 오히려 유리해짐으로써 심지어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조차 나타나게 된다.

넷째, 일본은 투자를 촉진하고 일본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중앙은행 재할금리의 제로화 및 이를 통한 일본 엔(円)화의 평가절하 정책을 장기간 견지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오랫동안 그리고 거대한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하는 한 당연히 엔고(円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통화량 증발 및 중앙은행 재할금리의 제로화(실질금리를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로까지 되게) 등으로 이른바 '엔캐리자금'이란 이름으로 자본수지를 대규모로 유출시켜 엔저(円低)를 조성시킨 것이다. 엔저는 기대한 대로 일본의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일본의 상품 및 서비스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

다섯째, 신규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의 도입이 뜻하는 의미는 창업에 필요한 일련의 규제를 크게 철폐함으로써 창업하기 쉽게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채택으로 신규기업의 설립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日노조, 정치투쟁보다 고용확보에 역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는 불황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여 시행착오를 적지 않게 경험했다. 그러다가 후반기, 특히 고이즈미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종래까지의 후발국적 발전논리를 가능한 축소하는, 말하자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을 확대하



도쿄 증시의 주식시세표를 읽고 있는 투자자

며 나아가서 투자증대와 대외경쟁력의 강화에 정책노력을 집중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이 적중하여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으로서는 기술한 정책 환경을 활용하여 과잉 채무·시설을 정리함과 동시에 자기의 비교우위 분야에 그들의 경영자원을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쉽게 재배치·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산·학·연, 말하자면 일본의 각 부문의 기술개발인력을 각 기업의 필요에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어 기술축적을 용이하게 추진해 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이자율의 인하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엔화의 가치를 크게 평가절하시킴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말하자면, 기술축적을 통한 품질경쟁력의 향상과 금리인하, 엔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투자·수출의 증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전체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그들의 주식 중 해외 자본의 비율이 그들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이 안될 뿐 아니라 그룹 내 상호출자의 존재 및 여타 제도적 존재로 인해 국내외로부터의 경영권 도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경영권 방어 때문에 투자를 억제해야 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성노조의 존재가 기업투자를 억제시키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노조는 정치투쟁이나 임금인상보다 고용확보에 역점을 두는 활동을 하고 있기에 파업이나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투자를 약화시키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70% 이상의 정규직이 확보되고 있어 최소한도의 내수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 걸쳐 설명한 일본경제의 불황탈출을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고 하겠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우리 경제와 원-원 하려면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낯선 한국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4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산업에서 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올해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생산가능직 외국인력 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했다. 『나라경제』는 고용허가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점점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사회와 함께 원-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註〉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장 **이태희**
외국인근로자 고용 창구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고용허가제로 노동시장 안정 지켜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창구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이태희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장
(lth1@molab.go.kr)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8월 17일 도입되었다. 이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 주는 제도이고 기존의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정부와 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단순기능 외국인력 활용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으므로 앞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외국인적 동포 포용정책에 따른 ‘방문취업제’가 올해 3월 4일부터 실시되어 중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적 동포의 국내 취업 절차가 대폭 완화되어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여기에서는 일반외국인의 고용절차와 외국인적 동포(고용특례자)의 고용절차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외국인적 동포 포용정책에 따른 ‘방문취업제’가 올해 3월 4일부터 실시되어 중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적 동포의 국내 취업 절차가 대폭 완화되어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여기에서는 일반외국인의 고용절차와 외국인적 동포(고용특례자)의 고용절차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송출국가 관련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우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이며, 예외적으로 신문·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정하고 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면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만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하다(자세한 요건은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www.molab.go.kr). 사업주는 이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절차를 본인이 직접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한 대행기관(필자 註 : 한국산업인력공단-전염증,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시킬 수 있다.

사업주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신청인원의 3배수 내지 5배수의 외국인구직자를 알선한다.

이때 사업주는 알선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국적·학력·신체조건 등을 갖춘 외국인구직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산업인



력공단은 사업주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하게 되며, 송출기관에서는 사업주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는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된다. 다만, 최근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의 경우는 발급 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송부되므로 별도의 사증발급인정서 송부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편의 및 송출비리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체결 대행,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등 송출국가 관련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를 막고 사업주가 원하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확보 등을 위하여 재고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사진) 서울 가리봉동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 이은 돌잔치에서 이주 노동자의 가족들이 돌잡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업무는 반드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고용허가서 작성 지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수령, 사증발급신청서 발급신청 및 수령 등의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한 대행기관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시킬 수 있다.

사업주와 최종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비전문취업(E-9)사증을 받고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팀(또는 취업교육팀)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 후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인계된 후 각자 정해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 및 한국국제노동재단(베트남·몽골)에서 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단순기능 외국인력 활용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문취업제’가 3월부터 실시되어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절차가 대폭 완화되었다.”

있으나, 향후 제조업은 한국국제노동재단(베트남·몽골·태국·중국(MOU 체결 시)), 중소기업중앙회(필리핀 등 기타 송출국가), 농축산업은 농협, 어업은 수협, 건설업은 건설협회에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마치고 건강검진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인계되어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사업주는 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외국동포도 자유로이 고용

외국국적 동포를 특례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와 같이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 1월 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거와 달리 건설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외국국적 동포를 특례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기존과 달리 근로자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여기에 기재된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동포의 고용이 가능하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 외국국적 동포는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취업사증인 방문취업사증(H-2)을 각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내에 친척 등 연고가 있는 동포의 입국만이 가능했으나 2007년 3월 4일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연고가 없는 동포의 입국도 가능하다. 다만 연고가 없는 동포의 경우는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쿼터의 제한을 두고 있고 이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정해진다. 참고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적용되는 쿼터는 3만명이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일반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필자註 :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이며, 2007. 7. 1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에서 20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상의 절차를 통하여 구직등록을 필한 외국국적 동포 중에서만 합법적으로 특례고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Tip

» 임금 및 복리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07. 1. 1~2007. 12. 31 : 시간급 3,480원)은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조기에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제공 및 주거지(전세·월세 등) 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에는 통상 임금의 50%씩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각종 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과 함께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베트남·파키스탄·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출국만기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퇴

직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갱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이동을 최대 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재고용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 체류기간 3년이 거의 종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이 다수 발생했다.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사업주가 원하는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확보 등을 위하여 재고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즉, 국내 취업기간 3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종전의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확인을 받으려 하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 1월 전부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기간만료자 재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시 동 확인서 사본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준다.

외국인근로자는 일단 출국한 후 재입국시에 노동부에서 발급한 재고용확인서와 법무부에서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해당 국가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된다. 다만, 당초의 사업장에 근무 조건으로 입국되는 것이므로 입국 후 동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입국 후 해당사업장에 근무 후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은 물론 고령사회 또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향후 20년 이내에 생산가능인력 부족 문제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편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에 기대기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받되,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우를 해주는 정정당한 외국인력 활용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하면 된다.

다만, 동포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사업장의 고용가능인원 초과 여부, 동포 노동이동 상황 등의 파악을 위해 외국국적동포를 특례고용한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동포고용 사실을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가능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 출입국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으므로 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동포에 대한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외국인의 경우는 여전히 출입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3년 취업기간 만료 후 재고용이 문제될 수 있다. 과거 산업연수제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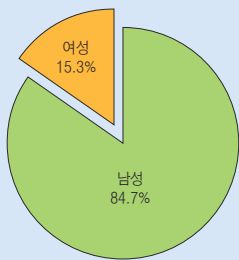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고용해 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본부에서는 '06. 10. 23~11. 30(6주)간 일반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사업체는 제조업, 경기지역에 위치한 내국인근로자 30인 미만, 외국인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 및 고무·플라스틱 업종과 같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업종에 외국인력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8점(5점 척도 기준)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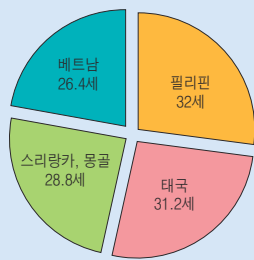
아래 내용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편집자註>

● 외국인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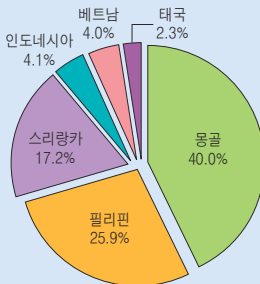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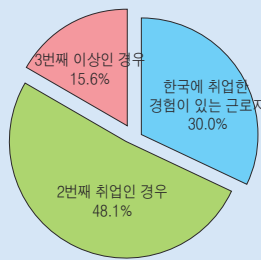
■ 평균연령



■ 학력수준(대졸 이상)



■ 한국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 국적별 취업생활에 대한 만족도



* 80.9%가 급여의 평균 72.6만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액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제공받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이 51.7%를 차지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국적별 취업생활에 대한 만족도(※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5점으로 측정)

● 고용주 대상 조사 결과 (복수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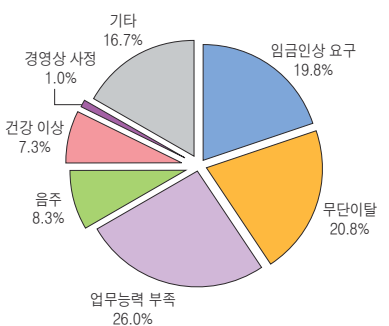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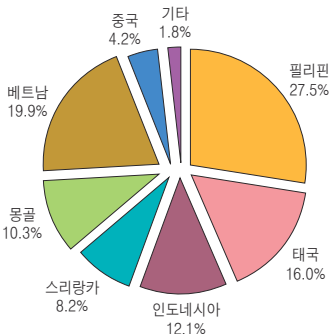
항 목	성실성	한국어	업무 능력	동료 관계	신체 조건	연령	적응력	종합	
전 체	3.48	3.12	3.23	2.98	3.18	3.11	3.58	3.28	
내국인 근로자수	30인 미만	3.59	3.25	3.31	3.09	3.24	3.24	3.71	3.41
	30인 미만	3.30	2.90	3.10	2.77	2.90	2.90	3.40	3.06
외국인 근로자수	30인 미만	3.51	3.14	3.22	3.01	3.26	3.21	3.61	3.32
	30인 미만	3.47	3.13	3.26	2.96	3.12	3.05	3.58	3.25

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으로 하여 5점 척도로 평균점수를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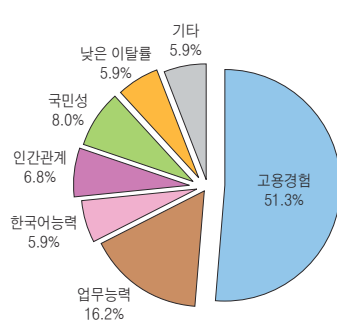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포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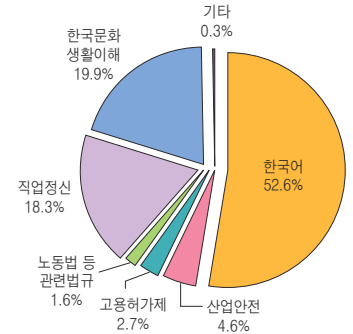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시 선호국가>



<특정국가 선호이유>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교육>



고용허가제로 노동시장 안정 지켜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dhseol@gmail.com)

- 서울대 사회학과
- 서울대 사회학 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지난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직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정부는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으나,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2006년 12월 31일까지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과도기를 거쳐, 마침내 제도 일원화를 달성하였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가 아니다

산업연수제는 국내 기업이 저개발국 출신의 연수생을 받아들여 실무연수를 통해 기술을 이전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 연수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만 부과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편법' 시비의 대상이었다. 산업연수생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산업연수생 도입 실무를 맡은 사용자 단체들이 송출기관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업연수생들은 거액의 송출비용을 치르고 입국하였다. 그 결과, 취업 계약기간이 만료된 산업연수생들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는 상황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공식적 외국인력제도는 산업연수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체

류자를 묵인하며 기업과 건설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관행이 유지되었다. 2003년 3월 말에는 전체 외국인력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8.2%에 달했을 정도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유명무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전락한 경우가 속출하였다. 결국 국내 이주노동자의 상태는 인권침해·불법체류·송출비리로 얼룩졌고, 공식적 외국인력제도인 산업연수제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들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8월 17일 산업연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사업주의 불법체류자 고용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기 힘들었던 원인을 대체 인력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에서 찾고, '내국인을 채용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편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산업연수제를 대체할 제도로 이주노동자를 '근로자'로 처우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제가 이주노동자를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기 힘든 외곽지대에 방치하였다면, 고용허가제는 그들을 노동3권을 가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정부 간 쌍무협정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함으로써 송출비용을



낮추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당시 국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접수를 받아 '시한부 합법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새로 생겨난 불법체류자와 자진 귀국 약속을 어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한 강제퇴거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졌다.

그렇지만 2005년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18만792명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52.3%였다. 불법체류자 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자였다. 더구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로, 산업연수제의 문제점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 1월 1일부터 생산가능직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한 것이다.



국세청

고용허가제도 실시 이후, 국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을 갖게 되어, 그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졌다. 사진은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

국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는 고용계약에 의해 신분이 규정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자유롭게' 사업장을 옮길 수는 없으나,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산업연수제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지만,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비전문취업자는 그보다 훨씬 쉽게 직장을 옮길 수 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내국인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침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고,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국내 기업 또는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서'를 발부한다.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기 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선진적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로 폄하하는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용허가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주노동자 인권기준을 보장하고,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잠식하지 않으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해서는 반드시 한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 모든 나라는 생산가능직 이주노동자의 자유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약'을 근거로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주노동자

의 자유로운 취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 그들의 사업장 이동을 통제하는 것은 생산직 이주노동자를 관리하는 각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이다. 이 점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다.

더구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이제는 그 이동 사유가 합당한 경우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고용허가제도 실시 이후, 국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그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이 산업연수제보다 훨씬 개선되었음을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퇴거는 지속돼야

또한 일부 논자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산업연수제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누렸던 불법체류자들이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인 신참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합법취업자와 불법체류자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수당과 부가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 총액 임금 수준은 '해당기업에 갓 입사한 신참 한국인 노동자' 또는 '특별한 숙련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임금수준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충분한 외국인력이 중소·영세기업에 대량 공급되었고 각종 수당과 부가급여 차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3D직종의 기본급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관행이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통제해서 시장임금보다 낮게



지난해 11월 노동부 주최로 열린 '2007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기념 단축마라톤'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출발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임금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영세기업의 일자리 자체가 내국인노동자를 충원하기 힘들 정도로 저임금 직종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는 본국에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수준·고용조건 등을 검토한 후 그것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힌 후,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왔다. 만약 그가 임금수준에 불만이 있으면 그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다른 기업을 찾아 나서면 될 일이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나라에서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를 충원할 경우 채택하는 보편적 방식이다.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퇴거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다. 고용허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통제가 관건이니 만큼,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체류자 신고 접수 및 합법화 조치를 단행하

였고, 그 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경우,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는 커질 것이고, 또 과거 산업연수제가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력제도의 붕괴까지 초래할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주노동자든 정규직 노동자든 관계없이 처벌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동정어가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만, 원칙을 훼손하면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온정주의에 치우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단속하고 강제추방한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비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2007년 3월 한국을 방문한 브런슨 매킨리(Brunson McKinley)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무총장이 밝힌 것처럼 "한국의 고용

허가제는 잘 생각해 만든 좋은 시스템으로,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많은 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선진적 제도를 '현대판 노예제'로 폄훼하는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용허가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주노동자 인권기준을 보장하고,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잠식하지 않으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였을 지라도, 그것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쳐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외국인노동자와 한국경제는 윈-윈할 수 있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ru



해/외/시/장 리/포/트

에너지 대국 꿈꾸는 잉카의 후예, 페루



잉카인들이 마지막으로 은거한 '최후의 도시' 마추픽추

남아메리카 중부에 위치한 페루

우 리나라의 13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페루는 금 생산량 세계 6위, 은 생산량 세계 2위, 동 생산량은 세계 3위의 자원대국으로 우리나라에는 잉카유적지인 마추픽추(Machu Picchu)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광물자원뿐 아니라 일일 8만 배럴 정도의 석유와 수요보다 더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석유는 생산량보다 소비가 많아 수요의 60% 정도를 수입하고 있지만, 가스는 확인매장량이 13조ftm³에 달하는 카미시아(Camisea)에서의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초과해 생산량의 일부를 재매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가스매장량에 힘입어 주 에너지를 가스로 전환 중

이처럼 엄청난 가스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생산이 소비를 앞서게 되자 페루정부는 국가의 주 에너지를 석유에서 가스로 변환하기 위한

‘주 에너지 가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국가의 주 에너지원을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에서 국내 생산이 충분한 가스로 변환하여 에너지 수입비용을 줄이는 한편, 가스에서 추출되는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각종 산업원자재용 가스(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페루정부는 가스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차량 보급 및 충전소 건설, 가정 및 공장용의 가스보급, 가스(석유)화학산업 건설, LNG 생산기지 건설 및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스 사용자 및 투자자에 대한 지원법안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 산업에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페를 크라이스트 행사’에서 수천명의 신자들이 페루에서 가장 추앙받는 카톨릭 성상인 ‘기적의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행진하고 있다.

페루정부는 국가의 주 에너지를 석유에서 가스로 변환하기 위한 ‘주 에너지 가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스 사용자 및 투자자에 대한 지원법안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 산업에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을 이용한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적극 나서고 있다.

페루정부의 주 에너지원 가스화 정책의 기반이 되는 카미시아 가스개발사업에는 우리나라의 SK그룹도 참여하고 있다. 페루의 국

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SK는 카미시아 가스개발사업 뿐 아니라 카미시아 가스를 액화하여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에 수출하기 위한 LNG 생산 및 수출 프로젝트인 ‘카미시아 II 사업’에도 ‘Hunt Oil’를 비롯한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과 공동 참여하고 있다.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730Km 떨어져 있는 카미시아에서 생산된 가스는 2005년 8월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리마 시내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 가스는 ‘Calidda’라는 가스공급회사에 의해 각 가정과 공장으로 공급되고 있다.

가스가 리마에 공급되자 시내 곳곳에 천연가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충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5개에 불과했던 천연가스 충전소는 대기업들의 참여로 올해 안에 10개 이상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리마시는 택시 및 승용차를 천연가스로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모두 천연가스버스(GNV)로 교체하기 위한 프로젝트(COSAC)를 추진 중이다. 시장 산하의 교통관리공단인 ‘Pro Transporte’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 내에 8만 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천연가스버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외국 자동차회사들이 페루에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석유화학산업 유치 적극 나서

페루는 이와 같이 다량의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 자원을 이용하여 암모니아·폴리에틸렌 등 각종 산업용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산업은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수억달러의 석유화학제품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진흥법(Ley de Promocion de la Industria Petroquimica)’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생산부에서 작성 중에 있는데 재정경제부의 심의를 거친 후 올 상반기 중 의회 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 외에 민간 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일례로 페루 국립공과대학(Universidad Nacional de Ingenieria)은 4월 25~27일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페루의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주최 측에서

는 석유나 가스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서도 단기간에 석유화학산업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전문가 초빙을 추진하고 있다.

페루의 주 에너지 가스화 정책 및 석유화학산업 유치노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페루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석유화학산업을 육성, 석유화학 강국이 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페루에 전파하고 페루에 관련 기술 및 플랜트를 수출하거나 동 분야에 투자하여 향후 페루 석유화학산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카미시아의 가스 생산으로 인근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와 자용을 겨룰 수 있는 중남미 에너지 대국을 꿈꾸는 페루의 야

심 찬 계획은 외국자본의 유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페루에서는 국제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주도권 다툼과 시장쟁탈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페루 중동부에 위치한 카미시아 가스전 개발공사 현장

을 수입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선진국인 우리나라로부터도 연간 5천만달러 가량의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원료는 풍부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게 되자 페루는 지난해부터 석유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은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자본이나 기술력을 가진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없이는 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페루 정부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들에게 조세를 비롯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Brescia’, ‘Gloria’, ‘Ajegrupo’ 등의 페루 내 대기업이 석유화학산업의 1단계인 암모니아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중에는 브라질 국영석유공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비료 및 암모니아 생산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총 투자 예상액만도 2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브라질 및 멕시코의 석유화학기업을 비롯해 투자 희망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투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경
KOTRA
리마무역관장
(haojk@kotra.or.kr)

유해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해 화학물질 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스템 운영, '알기 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도 발간할 계획



이민호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장
(mhlee@me.go.kr)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가 전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일상생활용품과 산업의 원료, 의약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전세계적으로 10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종이 새롭게 진입할 정도로 시장규모도 크다.

유엔은 모든 단계(life-cycle)에서 화학물질이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실천 계획을 망라한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전략(SAICM)'을 지난해 2월 채택하고 각국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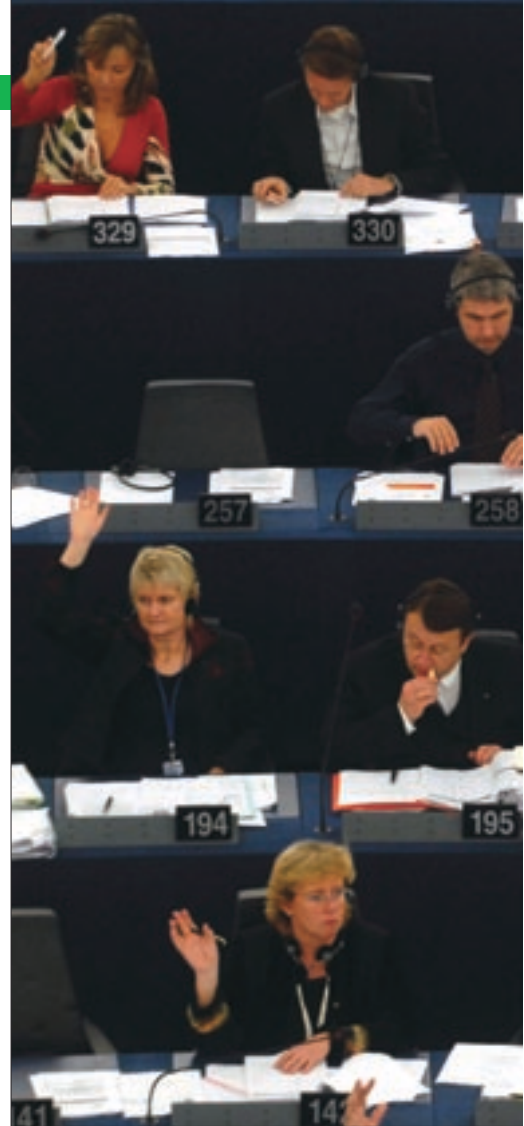
EU의 'REACH' 6월 시행, 기업부담 커져

EU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그 성분을 사전 등록·평가 및 필요 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도입방안을 지난해 12월 EU의회에서 확정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화학물질 시험분석 비용만 1조~2조원에 이를 정도로 세계 화학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을 2008년까지 각국이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도 2004년 5월부터 발효되어 DDT·PCBs 등 12개 POPs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기인한 새집증후군 문제, 어린이용 완구·교재에서 프탈레이트 사용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근간으로 화학물질의 제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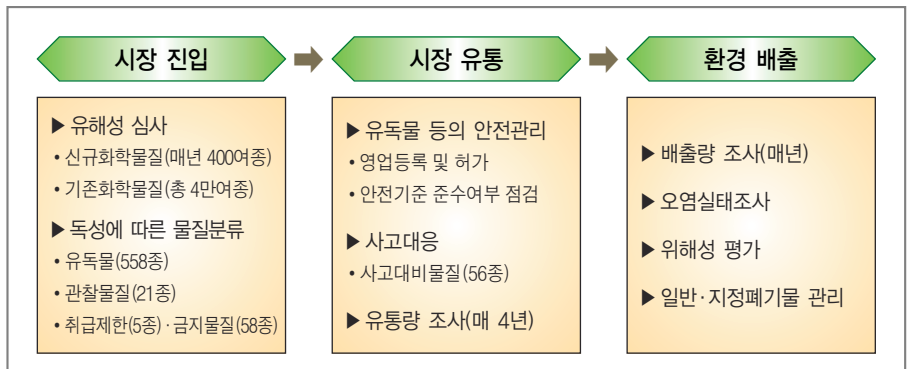
화학물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경우('신규화학물질')에는 국립



환경과학원의 유해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되어 제조·유통 과정이 특별 관리된다. 현재 558종이 유독물로, 21종이 관찰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유해성심사 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까지는 유해성 심사 시

〈그림 1〉 제조·유통단계별 화학물질 관리





EU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그 성분을 사전 등록·평가하고 필요시 승인받도록 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방안을 지난해 12월 EU의회에서 확정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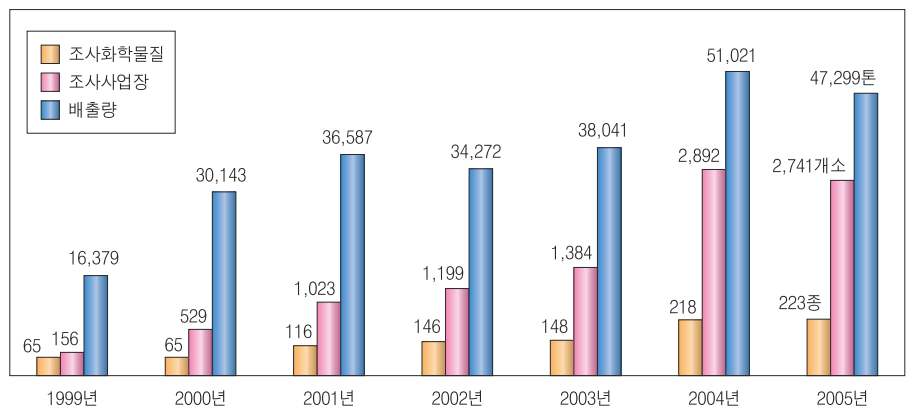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 등 세 가지 항목만을 심사하였으나 올해부터 어류생태독성 등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2011년까지는 OECD가 권고한 13개 항목을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해성(hazard) 정도에 따른 유독물 지정과 별도로 화학물질이 실제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용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특정용도만 사용할 수 있는 취급제한물질(말라카이트그린·오산화비스도 등 5종)과 국내 제조·유통 자체를 불허하는 '취급금지물질제도'를 운영(PCBs·HCH 등 58종)하고 있다. 어린이용품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경우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

고 사업자 스스로 원료물질의 손실을 줄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해 온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가 정착되고 있다. 그간 조사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2004년 이후에는 유해성이 큰 388개 화학물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물질을

<그림 2> 연도별 배출량 추이



연간 1~10t 이상 제조·사용하는 종업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을 조사하고 있다.

어린이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 더욱 철저히

생활 주변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는 누구나 궁금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정부는 그간 배출량 조사결과를 업종별·지역별·물질별 등으로 가공하여 공개해 왔으나,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별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제도를 2008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님비현상이 잔존하는 우리 여건에서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으나 기업의 참여를 촉발하여 화학물질 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개방법과 절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발적 협약이 도입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기나 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배출 농도를 정하여 특별히 관리된다. 그러나 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공정 중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별도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정부-사업자-시민단체-지자체 간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인 '30/50프로그램'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개 사업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 사업장은 화학물질을 2001년 배출량 대비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 이하로 줄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2010년경에는 전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이 20% 이상 저감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화학물질에 매우 취약하다.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는 소비자단체 등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해성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7년 중에 프탈레이트·포름알데히드·오산화비소 등 6종의 유해물질을 어린이용품이나 생활용품에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이미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놀이터처럼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대해서는 납 등 화학물질의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유엔 차원에서 2008년부터 GHS 제도를 도입토록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중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을 국제시스템에 맞게 변경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응하여 표지시스템



환경연합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21세기 생명환경위원회'가 '어린이 환경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도 새롭게 개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국가별로 분류·표지가 달라 교역 시 추가비용을 들여 상대국의 기준에 맞추어야 했던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통일된 형태의 안전정보가 사용됨으로써 근로자 및 사용자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제공할 필요성

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화학물질 정보시스템(National Chemicals Information System, <http://ncis.nier.go.kr>),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시스템(<http://tri.nier.go.kr/triopen>)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주요 화학물질들의 위해성을 일반인 눈높이로 쓴 ‘알기 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6월부터 REACH가 시행되면 산업계의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EU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출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위해정보를 제조·수출자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그간 신규물질의 위해성심사만 받아오던 기업이 10만여 종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위해성을 분석하여 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공동생산하고 EU 당국이나 대규모 다국적 화학기업 등과의 정보수집을 위한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내에 설치(2006. 9)된 ‘REACH 대응추진기획단(T/F)’을 활용하여 REACH가 시행되는 2007년 초까지는 REACH 대응 산업계 지원체계 마련부터 향후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 인프라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전등록 기간(2007. 6~2008. 6) 이전까지는 사전등록 준비를 위한 ‘REACH 대응센터’ 발족, 산업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우수 시험기관(GLP) 지원·육성, 국내 유통되는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DB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ncis.nier.go.kr>)



화학물질배출량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tri.nier.go.kr/triopen>)

건방진(?) 기자와 친해지기

“3명의 ○○ 모시기가 빈대 세 가마니 모시기보다 힘들다”

“3명의 ○○ 모시고 출장가기가 빈대 세 마리를 경부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에 나란히 세워 서울까지 몰고 오기보다 더 힘들다”

위의 문장에서 ○○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기자다. 기자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다. 그러나 기자를 상대하는 사람들, 즉 고위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얼마나 건방지고 문제가 많길래 이 같은 황당한 말들이 통용될까? 기자는 정말 건방지고 버릇없는 사람들일까? 어떻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언론인이라며 출입처를 활개치고 다닐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의문들이다.

기자가 얼마나 무례한지는 정부부처나 기업의 대 언론매뉴얼에 잘 나타나 있다. 모 대기업의 직원 교육자료에는 “(기자가 버릇없고 건방지더라도) 끝까지 참아라. 모멸감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순한 표현이다. 말로 교육시킬 땐 “기자를 만나는 순간 간도 쓸개도 없다고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기자를 상대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기자가 건방지고 무례하다고 느낀다. 사실 기자가 겸손하다고 좋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이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필자도 왕년에는 ‘한가닥했던’ 기자였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에서도 기자에게 언제

나 겸손할 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 기자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자를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버거운 기자들을 상대하려면 이들의 속성과 생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끼놓고 애



기하자면 기자들은 건방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우선 취재일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자들은 쪼다. 20대 후반이거나 30대가 대부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들과 상대하는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원들은 40대 후반이거나 50대가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나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회에서 새파란 아들 같은 기자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 나이는 20대이지만 소속 언론사를 대표해서 출입처에 나온 것임을 공무원들은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의 기자사회에 ‘님’이라는 글자는 없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스물세 살 먹은

선배 여기자가(군대 관계로 나이는 적지만 입사는 빨랐다) 환갑이 내일모레인 편집국장에게 “○국장 밥 먹으러 갑시다”라며 툭 던지는 한마디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님’ 자는 없다. 그렇게 교육받는다. 새파란 수습기자도 ○부장, ○국장으로 부른다. 행여 기자들이 당신들에게 님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마시라. 그들은 아버지 큰형님뻘 되는 국장에게도 스스럼없이 ‘○국장’이라고 부르지만 ‘○국장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기자들도 할 말은 있다. 겸손한 기자가 취재 잘하고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감추기 좋아하는 관공서를 취재하는데 겸손하게 나와서는 취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쭈셔서 뭔가를 들춰내야 하는 직업특성상 공손하기가 쉽겠는가? 그래서 기자들의 건방짐과 무례함은 취재의 필요악이라고 정리하는 언론학자도 있다.

그러나 막상 취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자들은 다정다감하고 의리도 있고 여러모로 사귄 만하다. 그러니 공무원 여러분, 기자들이 건방지고 무례하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 봄이 어떠하실지. 기자들과 우정을 구축해 보는 것도 공무원으로 성공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



김동률

KDI 연구위원, 저널리즘

- 美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h.D.
- 전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해외진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해 드려요

범부처 공동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발표... KOTRA에
'해외진출정보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하고 'Global Korea' 신설,
무역협회 주도로 베트남에 '한국비즈니스타워'도 건립



이승재
산업자원부
통상협력정책과장
(seung@mocie.go.kr)

지난 2월 27일 범부처 공동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왔고, 지난해에는 2005년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185억달러로 집계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개인과 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찍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온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도 자원 확보 및 선진기술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해외진출에 국가적 역할을 집중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해외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국가별 T/F를 구성하여 양자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바 있다.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남미 등 우리 정상급의 해외 순방 시 상대국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고,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였다. 자원빈국이면서도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과 산업기반이 이들

자원부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Global Korea' 신설, 해외진출정보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

이번에 발표된 지원방안은 설문조사·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해외진출기업 및 진출희망 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외 진출기업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정보인 점을 감안하여 유관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KOTRA에 '해외진출정보 통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Invest Korea'에 상응하는 'Global Korea'를 신설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 무료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보다 고급정보를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무역협회를 통해 전문컨설팅 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초기 해외 진출업체들 간 상호 정보공유의 장인 인큐베이터와 유관기관들의 one-roof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던 점을 감안, 무역협회 주도로 베트남에 '한국비즈니스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이 급성장에 따라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이번 지원방안은 특히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출시된 바 있는 유전개발펀드의 후속 펀드를 비롯하여, 유연탄·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해외건설수주와 연계된 '해외건설 1호펀드'를 출시하고 역외펀드(off shore)등 다양한 해외개발형 펀드를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미 2005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설비를 일일이 나열하여 증빙토록 함으로써, 실제로 혜택을 본 기업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부장치 나열방식인 현행 세액공제 감면대상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 분야의 인력 사정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반이 붕괴되면서 취업을 하락, 학부제 영향 등으로 자원개발인력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자원개발 전문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자원개발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자원개발전문기업(대기업포함)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분야의 경우에도 수주확대 및



해외투자는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지난해 3월 인도 하리아나주 구루가온시에서 열린 삼성휴대폰 인도공장 준공식에서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후다 인도 하리아나 주지사(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라 향후 3년간 2,500여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DB를 구축(06.4)하여 필요인력을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해외건설협회 내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해외개발사업 추진방식이 ‘단순 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주처들이 대규모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 기업에게 국제자본 신용공여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선진국 기업에 비해 금융능력이 떨어지는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진출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의 융자금에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도입키로 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간 나이지리아·알제리 등과의 경험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패키지형 진출 성공 모델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박스기

사 참조). 이를 위해 기업차원의 자발적 수요와 국가차원의 전략적 진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컨설팅팀’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와 진출대상국의 산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 패키지 진출전략심의회(위원장 : 산자부장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패키지 진출 전략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확정된 진출전략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대국에 제시하고, 민관공동T/F 등을 통해 세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업 해외진출을 국가경쟁력 제고 기회로

구체적 지원사업의 내용과는 별개로 국내 투자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도 시급한 현시점에서 왜 정부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였는지를 살펴보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걸다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최근 해외투자 증가의 배경에는 풍부해진 국내 외환사정이 큰 몫을 담당한 것이 사실

이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글로벌화로 가치사슬에 의한 국제분업구조가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과감한 해외투자 규제완화 및 적극적 지원 의지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별도의 지원대책 없이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해외진출을 다시 강조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바로 해외진출이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의 한계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국내산업의 고도화이며, 이는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경상수지·자본수지 동반흑자로 인한 환율 압력 및 국내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

해소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해외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간의 해외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 Toyota사는 환차손·관세·생산비 절감, 시장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생산비중(2005)을 41%로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현대자동차는 2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0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은 4.6%인 데 반해 일본은 16.3%, 미국은 16.4%, 영국은 56.2%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분석 없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실패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등 투자대상국의 정책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진출기업의 현지 적응 실패는 국내 모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부유출 및 국내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와 국내산업의 공동화 문제는 좀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 LG전자는 지난 3월 사우디 현지 에어컨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LG-사키'를 설립하고 기공식을 가졌다.

먼저, 국내 산업구조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들도 해외투자가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4년 산업연구원 조사는 해외투자가 연간 순수 무역흑자 33억8천만달러, 생산유발 19조1천억원, 고용유발 8만8천명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5년 미국 국립경제조사국(NBER)의 조사에서도 해외투자가 10% 증가할 경우 국

내투자 2.2%, 고용지출 4%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해외투자를 통해 기업 내 처부가가치 부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R&D, 마케팅, 시제품 생산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시킨다면 기업 전체의 경쟁력이 커질 것이다. 이는 산업 간 관계에도 적용되어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즉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서는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 유치만 좋은 것이고 해외투자는 나쁘다는 인식은 전환되어야 한다. 국내시장 규모를 넘어선 산업은 과감히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Global Invest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첩경이다. ■

패키지형 진출이란?

전략국가에 대한 연관산업 동반진출 또는 전산업 분야에 걸친 포괄적 산업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성고를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 방식으로 나이지리아형과 알제리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 나이지리아형(자원개발+산업협력)

* 33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조건으로 20억배럴 규모 해상광구 탐사권 획득 및 획득비용 할인(총 3억2천달러 중 2억3천달러 할인)

* 철도현대화사업 자금일부를 지원하고 생산유전 지분 획득

- 알제리형(경제개발경험전수+프로젝트수주·시장개척)

* 정기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전산업을 포괄하는 선단형 산업협력 추진 (부이난신도시건설, LG컨소시엄 석유화학, 삼성테크윈 방산진출 등)

폐기물부담금 최대 20배 올려

현행 부담금 부과율을 지나치게 낮아, 실처리비 수준의 부담금을 내도록 해 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해



이찬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lch1011@me.go.kr)

폐기물 부담금이 5년간 최고 20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살충제,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 등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92년 12월 ‘자원절약법’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원은 「합성수지처리사업법」에 의거해 합성수지부담금제도가 시작된 197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합성수지부담금은 농촌 폐비닐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비닐을 배출한 농민들을 대신하여 합성수지원료를 제조한 사업자에게 부과되었다.

1992년 ‘자원절약법’이 제정되면서 폐기물부담금은 위 합성수지 외에 유독물 용기, 화장품, 과자제품, 전지, 부동액, 형광등,

껌, 1회용 기저귀 등 8개 제품이 추가되어 총 9개 제품에 부과되었다. 이후 과자·화장품 등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품으로 전환·폐지되고, 담배 등의 품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살충제·유독물을 담은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총 6개 품목이 부과 대상에 속한다.

부담금 지나치게 낮아 인상 불가피해

폐기물부담금제도를 개선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현행 부담금 부과 요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자원절약법’에서는 폐기물의 실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의 부과 수준은 실처리 비용의 약 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플라스틱의 경우 실제 처리비가 kg당 300원 이상에 달하나 현행 부담금 요율은 kg당 3.8~7.6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아 실처리비 수준의 재활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줄곧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두 번째 배경은 부과 대상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행 법령상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다면 품목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부과 대상은 중간재와 일부 최종제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간재에도 부과하다 보니, 국외로 수출하는 제품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 대상 제품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세 번째 배경은 부과 기준의 이원화 문제이다. 현행 제도는 부과 대상을 국내생산제품과 수입제품으로 구분하여 국내제품은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제품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 요율이 고정되어 있는 국내 제품에 비하여 수입제품은 합성수지 투입량과 상관없이 제품가격이 인상되면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네 번째 배경은 현행 제도가 재활용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주부협진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오름에 따라 세금으로 충당하던 폐기물 처리비 상당 부분을 원인가 부담하게 되었다. 사진은 폐품으로 만든 장난감을 보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대상 품목 중 사업자가 일부만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면제·경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현행 제도에서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현행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실처리비와 차이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부과요율 최대 20배 인상, 원인가 부담 강화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20배 정도 인상하여 사업자들이 실처리비 수준의 부담금을 부담하

도록 하였다.

둘째,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다른 부담금 품목과 같이 최종 제품으로 통일하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 하였다. 또한 수출품에는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제품에 관계 없이 부담금 산출기준을 합성수지투입량으로 일원화하여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하였다.

셋째, 재활용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고려해 플라스틱을 연간 10t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부과요율을 물가 등 가격지수에 연동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처리비와 부담금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원인가 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돼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던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의 폐기물 처리비 상당 부분을 원인가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고, 사용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담금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되어 사업자들이 느끼는 재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제도 개선의 효과는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의 순환이용을 증대시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도 친환경설계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며, 폐기물처리

〈표〉 부담금 요율 조정안

품 목 대상(단위)	살충제 등 용기(개당)	부동액 부동액(ℓ)	껌 판매가	기저귀 기저귀(개당)	플라스틱	
					일반(kg당)	건축용(kg당)
현 행	6~16원	30원	0.27%	1.2원	7.6원	3.8원
개정안	24.9~84.3원	189.8원	1.8%	5.5원	150원	75원



두사람은
영향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세, 각종 부담금 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휴렛팩커드사의 재활용 시설 모습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 강화를 위하여 환경세, 물품세, 각종 부담금 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환경경영과 제품책임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는 제품 생산자가 당해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부담금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되고, 사업자가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촉진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친환경설계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경제정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잡지!

나라경제



<http://nara.kdi.re.kr>



꾸벅꾸벅 춘곤증엔 상큼한 봄나물을

한 해 농사 가운데 봄철농사가 가장 중요하듯이 1년 동안 내 몸의 건강을 쥐고 있는 것 역시 봄철의 양생이다. 봄 기운에 맞게 몸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름에 냉병 등 다른 질환에 걸리기 쉽고, 여름을 부실하게 나면 가을 겨울 모두 건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너무 졸릴 때는 짧은 낮잠을

봄에 나른하고 피곤하며 입맛이 없는 증상들을 넓은 의미에서 춘곤증이라고 하는데,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연의 생동하는 기운을 받으며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서 몸이 전반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고, 섭생도 비위를 조화롭게 해서 소화나 식욕을 돋우면 좋을 것이다. 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해주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낮 동안에도 틈틈이 맨손체조나 산책 등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운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문질러 주거나 컷바퀴 등을 마사지해 주어 몸을 깨우는 방법도 써 볼지하다. 이렇게 가볍게 몸을 풀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고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돼 피로감이 덜하고 몸도 가벼워져 상쾌해질 것이다.

하지만 너무 졸린 경우에는 굳이 참지 말고 낮잠을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낮잠은 낮잠답게 30분 이내로 잠깐 조는 정도가



좋으며, 너무 긴 시간을 자게 되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리듬이 깨져 몸이 더 무거워지므로 유념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봄에는 맵거나 진한 맛의 음식보다는 봄나물과 같은 담백한 맛을 먹도록 권한다. 실제로 씹쓸하고 단맛이 있으며 향기가 있는 약재들은 대개 식욕을 돋우고 기운을 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봄나물들의 특징과도 비슷하다.

봄나물의 대표 격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냉이인데, 냉이는 제채(薺菜)라고 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식욕을 돋을 뿐 아니라, 간을 다스려서 피로에도 좋고, 눈도 맑게 해주어 봄철에 항상 피곤하고 소변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좋다.

이 밖에도 봄나물들은 그 자체가 약재로 일상에서 섭취하면 효과가 좋은데, 어혈을 없애고 몸의 독소와 부기 제거를 제거하고 변비 해소를 위해서는 유채나물이 좋고, 코피가 잘 날 때는 쑥과 시금치가 효과가 있으며,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에는 쑥갓이 좋고, 춘곤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수험생이나 셀러리맨에는 씀바귀나물이 좋다. 그리고 환절기에 목이 잘 아프고 기침이 잦은 사람은 취나물이 좋으며 두릅은 나른한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 최고다.

냉이된장국과 봄나물 비빔밥으로

활력 충전

봄에 특히 허약해서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조개류도 좋다. 조개는 강하지 않은 담백함을 지녔음은 물론 봄에 필요한 간의 기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안정맞춤이다. 실제로 나트륨, 인, 칼륨 등 무기질성분이 풍부하여 어린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비타민

B1, B2, C 등과 타우린 등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과 숙취, 성인병에도 좋다. 조개가 힘을 내게 한다면 나물은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봄에 반드시 먹어줘야 하는 음식들이다.

이처럼 운동과 음식의 균형 있는 섭생만으로도 계절의 단점을 보완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사소한 것을 지키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제철음식이 최고의 보양식임을 잊지 말고 냉이된장국에 봄나물에 쓱쓱 비빔밥 한 그릇 푹딱해보는 건 어떨까. ■

남자들의 마지막 장난감 ‘자동차’

삼성교통박물관

www.stm.or.kr

“너도 누구도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어! 좋은 나쁜 너의 미래는 네 자신이 만드는 거야!” 영화 ‘Back to the Future’에서 브라운 박사가 타임머신카 들로리언 DMC를 운전하며 한 말이다. ... 좋은 나쁜 우리는 지난 시절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자동차를 선택했고, 세계 5대 자동차 선진국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곳이 바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교통박물관이다.

현대적 감각의 통유리를 외벽으로 장식한 1층 실내 전시장은 크게 로비 전시장과 주 전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로비 전시장에는 Beauty Zone, Photo Zone 등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1886년 독일의 벤츠가 특허낸 벤츠 특허차(재현품)와 프랑스의 부가티(1933년산), 미국의 캐딜락 엘로라도(1957년산) 등 멋스런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 전시장에는 Prestige Zone, Sports Zone, Korean Zone 등 6개의 커다란 컨셉 구역으로 나누어 영국의 롤스로이스 실버 고스트(1910년산), 포드 모델 T(1923년산), 독일



2



3



4



5



6



7



8

1. 주전시장의 Prestige Zone 전경
2. 영화 Back to the Future의 들로리언 12
3. 벤츠 특허차-세계 최초의 가솔린엔진 내연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벤츠 특허차의 레플리카
4. 2층 '자동차 경주의 세계'에 전시된 스포츠카에 어린이가 시승한 모습
5. 현재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향장치와 현가장치
6. 드럼통을 펴서 차체를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국제 시-바라(始發) 자동차
7. 로비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프랑스의 부가티 T-49. 섬세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낸 예술차
8. 미국 GM에서 만든 1950년대 최고의 차 캐딜락 엘도라도
9. 1930년대 초 서구의 사람과 차의 어울림을 재현한 '2번가 이야기'

의 메르세데스벤츠 190SL 로드스터(1960년산), 한국의 국제 시-바라(始發) 자동차 2도어 등 다양한 자동차들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그 외에 자동차가 서양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가는 1930년대를 재미있게 표현한 '2번가 이야기',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동차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체험식 놀이공간 '자동차 나라' 그리고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움직이고 멈추게 되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동차 체험 나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은 자동차 경주 마니아들을 위한 코너로 F1(Formula 1)에 대해 소개하면서 알파 로메오 1750SS(1929년산, 이탈리아)부터 미나르디

M193(1993년산, 이탈리아)까지 전시하고 있다.

야외 전시장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거장 백남준의 설치작품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 모차르트의 장송곡을 조용히 연주하다'와 협계 증기기관차 '허기 11형 12호', 비행기 '스틴슨 L-5 센티넬', '비치크래프트 모델 18' 2대가 전시되어 있다. 또한 정문입구 오른쪽에는 '삼성애니카교통 나라'라는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교통안전과 질서 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동그란 '바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동

안 동그란 바퀴를 이용해 수레를 만들었고, 도르래를 만들었으며, 시계를 만들고, 자동차와 우주선까지 만들었다. 이제는 동그란 바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삼성교통박물관을 찾아가 미래에는 바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글·사진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9

관광 Tip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은 오후 5시까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휴관

▲ 관람요금

개인-대인 4,000원, 소인 3,000원
단체-대인 3,000원, 소인 2,000원

▲ 문의전화 : 031-320-9900

▲ 대중교통

서울-강남역에서 에버랜드행 좌석 버스(약 40분 소요)

수원-수원역에서 에버랜드행 좌석 및 일반버스

-무료셔틀버스 운행 : 에버랜드

정문매표소~삼성교통박물관

-130대 주차 가능

공공기관 투명경영의 초석을 놓다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법은 공공기관들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혁신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호 특별기획에서는 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달라지는 점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본다. <편집자 註>

방만경영·낙하산인사 Bye Bye~

비효율적 감독, 견제·균형장치 부재 등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 드러나,
'공공기관법' 통해 공공기관 투명·자율·책임 운영 이뤄질 것



김용진
기획예산처
정책총괄팀장
(yjk0504@mpb.go.kr)

정부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 제정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작업을

2005년 4월 30여개 회원국에 권고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가이드라인'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개선작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운영 이래로 공공기관 관리운영 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인 만큼 각계 각층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개선작업 시작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T/F, 공청회, 토론회,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느슨한 경영행태가 바로 잡고 투명하고도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반면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경영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자신들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관련부처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국회·언론은 공공기관 정책에 대하여 책임지

는 정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염원이 반영된 공공기관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12월에 의결하였다.

'공공기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고객이면서 동반자인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추진배경과 '공공기관법' 시행의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무원칙·비효율 등 공공기관 관리에 허점 많아

우선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공공기관에 관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설립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고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고 재정지원만 받는 기관들도 상당수 존재하게 되었다. 각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2년 11월에는 556개, 2004년 1월에는 350개, 2005년 2월에는 575개로 파악되어 주무부처들조차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방식도 원칙이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각각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무역투자진흥공사나 도로공사와 같이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이 동일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리방식도 원칙이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각각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무역투자진흥공사나 도로공사와 같이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이 동일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셋째, 공공기관 내부의 견제·균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1998년에는 이사장제도를, 1999년에는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온 한편, 감사나 비상임이사를 통한 견제기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기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는 상임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이사회는 경영진의 주도로 운영되어 경영감시나 통제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감사의 경우에는 내부경영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보다는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대응하는 기능에 치중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5년 7월의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기관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인사규정 등 핵심경영사항을 이사회에 올리지도 않고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넷째, 공공기관 임원인사제도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는 그간의 투명한 인사선임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모제를 시행하고 기관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국민들은 임원선임과정의 투명성이나 임원들의 능력과 자질보다는 어느 출신 인사인지에 관심을 더 많이 보여왔고 비판해 왔다. 또한, 현재의 획일적인 3년 단위의 임원임기제도는 기관장의 책임경영체계를 제대

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진이나 견제임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모두 주무부처장관으로 되어 있어 내부견제균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공공기관은 경쟁환경이 약하고, 도산위험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기업보다는 경영을 느슨하게 할 유인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공기관'하면 '비효율성'이나, '도덕적 해이'를 떠올리곤 한다. 실제로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능 통폐합 등으로 낭비요소 없애

이러한 문제점들이 주로 공공기관에 나타나는 이유는 민간기업과 달리 다층적 대리인 구조(국민-정부-공공기관) 아래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공공기관법'에 반영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현황을 투명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및 유형 구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고시토록 하였으며, 기관 신설심사제도와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시스템에 의한 인선이 되도록 하고,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였다. 우선 공공기관 유형별·임원별로 임면절차를 달리 설정하였다. 또한,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비상임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내부 견제업무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관리제도를 강화하였다. 공공기관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의 상시적

인 기능조정을 통해 기능·인력·조직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핵심사업의 경영성과를 짚을 수 있도록 지표 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의 포괄적 감독기능을 제한적·열거적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경영혁신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고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정착시키도록 하였다.

아무리 좋은 혁신방안이라 해도 참여주체들의 지지가 없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법제정과정에서 주무부처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영역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정된 법률은 경영투명성, 성과관리, 조직·재무 등 주무부처가 책임지기 어려운 경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핵심사업 위주로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해 줌으로써 득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간섭만 많아지고 제대로 된 책임과 감독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러나 정부 감독



4월부터 '공공기관법'이 시행되면서 '그들만의 잔치'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최로 열린 '수돗물 시음회'

권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전 협의권을 가급적 줄이고 이사회나 비상임이사의 업무지원을 통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나 공공기관 모두에게 유리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반대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이 정착되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아래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공공기관 경영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해 상호 시너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

공공기관 대충대충? 이제는 옛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공공기관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투명·공정한 인사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이후명
기획예산처
평가분석팀장
(hoomyung@mpb.go.k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년 12월 제정, 이하 '정투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년 12월

제정, 이하 '정산법')을 관계 법률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법' 시행과 동시에 두 법률은 폐지되며, 대상 기관들도 '공공기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새로 시행될 '공공기관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사시스템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

우선 '공공기관법'은 그동안 투자기관·산하기관·공기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용어를 '공공기관'으로 통일시키고, 그 요건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가 사업을 위탁·보조하는 기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부담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상호부조 기관이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경영관리와 지원을 하고자 공공기관 유형을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의 기준은 IMF의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와 EU의 ESA(European System of Accounts) 등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자체수입 비중(자체수입/총수입)을 적용하였다. 범위설정 및 유형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을 구축한 셈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임용시비를 차단하고 투명·공정 인사시스템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였다. 우선 기존에 기관장만 임원추천위원회 대상이었던 것을 상임이사·감사·비상임이사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임면권을 달리 설정했다. 즉, 주무부처의 정책추진이나 사업집행 등의 경영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장이나 상임이사는 주무부처 장관 등이 임명토록 하였

고, 견제와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비상임이사나 감사는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기업의 기관장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임면 과정에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원선임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내부 견제·균형기능 정상화해

'공공기관법'은 현재의 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15인 내에서 과반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토록 하였다. 비상임이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사요청권과 자료요구권을 부여하였다.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이들은 비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이사회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장형 공기업은 경영 자율성에 상응하는 만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POSCO 등과 같이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상임감사 대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비상임이사나 감사가 견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적임자를 선임하고,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량개발과 이사회 안전 요약정리, 경영

〈표 1〉 공공기관의 구분

유형	분류 기준
공기업(상업성>공공성) ① 시장형 ② 준시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총수입 ≥ 50% - 자체수입/총수입 ≥ 85% & 자산 2조원 이상 - 나머지 공기업
준정부기관(상업성>공공성) ③ 기금관리형 ④ 위탁집행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수입/총수입 < 50%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나머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법'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활동을 평가하도록 직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보수나 연·해임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관의 자율역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우선 경영감독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역할분담을 체계화하고 사전적 경영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경영감독을 하며, 주무부처는 사업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준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관행에 의한 정부규제를 제한하고, 감독사항을 열거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원 임면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공기업 기관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자기가 임명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를 종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임원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기관장의 조직과 업무 장악력

을 강화시키고 실질적인 연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이 경영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 산정방식이나 평가과정을 개선하여 평가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경영혁신지침·예산편성지침(예산관리기준)이나 인사운영지침 등을 경영지침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각종 지침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표 2〉 회계시스템의 변화

	현행		'공공기관법' 시행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투자기관('정부법')	산하기관 등(개별법)	
○ 회계원칙	• 발생주의	• 기관별로 상이	• 발생주의
○ 예산			
• 예산서	• 예산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	• 기관별로 상이 (수입·지출표 또는 재무제표 등)	• 예산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
• 예산 확정	• 이사회 의결 (주총 의결)	• 기관별로 상이 (이사회 의결, 주총 의결, 주무부 승인)	• 이사회 의결(주총 의결) * 준정부기관은 법상 주무부 승인 필요 시는 주무부 승인
• 예산 보고	• 기획처·주무부·감사원	• 기관별로 상이 (의무 없거나, 주무부 제출)	• 기획처·주무부·감사원
○ 결산			
• 외부회계감사	• 임의규정	• 기관별로 상이 (임의규정·의무화 등)	• 의무화
• 결산 확정	• 재정부 승인 (주총 의결)	• 기관별로 상이 (이사회 의결, 주총 의결, 주무부 승인 등)	• 공기업 → 재정부 승인 • 준정부기관 → 주무부 승인 (주총이 있는 경우 주총 의결)
• 감사원의 결산 검사	• 검사 대상	-	• 정부 출자 50% 이상 기관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제출	• 의무	-	• 의무화

통합공시제도로 경영상태 알기 쉬워져

일반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사 등의 확인을 거쳐 관련 사이트(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경영공시는 투명·윤리경영의 핵심 수단인 만큼 엄격하게 운영하여 불성실 공시나 허위 공시가 적발될 경우에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고, 결산은 외부회계감사를 통해서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법'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기관을 신설할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법률안에 근



수원시청

'공공기관법'은 정치적 임용시비를 차단하고 투명·공정 인사시스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였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열린 공기업 최고경영자 연찬회

거하여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으려 하는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1/2를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기관 신설 필요성, 재정지원 필요성 및 신설효과 등을 종합적으

로 심사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혁신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혁신우수사례집이나

매뉴얼을 발간·공유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현장을 운영하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고객현장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기본업무, 서비스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시정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의 고객현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처리 모델' 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

다. 고객만족도조사는 현행 투자기관·산하기관·출연연구기관 및 부처자율선정기관 등 법 적용에 따라 주관부처를 달리하여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기획예산처가 일괄적으로 주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유형별·업무성격별로 대상기관을 세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조사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감독의 중심기구로서 공공기관 지정·분류, 기관신설심사, 경영공시, 기능조정, 임원 임면, 경영평가, 경영지침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학계·경제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촉된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법'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가 정착되고, 경영투명성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표 3〉 인사시스템의 변화

	현행	공공기관법 시행 후	
• 임원추천위	기관장만 적용	모든 임원에 대해 적용	
•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투자기관 : 감사·비상임이사 산하기관 : 해당 없음.	공기업 :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 정부기관 : 감사·비상임이사	
• 임기	모든 임원 : 3년 임기 연임 규정 없음.	기관장 : 3년, 기타 임원 : 2년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 임명권자	〈공기업〉 (4개 정부투자기관 기준)		
	기관장	대통령	대통령 (소규모는 주무장관)
	상임이사	주무장관	기관장
	감사	대통령	대통령 (소규모는 기획예산처장관)
비상임이사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준정부기관〉			
기관장	대부분 주무장관	주무장관 (대규모는 대통령)	
상임이사	주무장관	주무장관	
감사	대부분 주무장관	기획처장관 (대규모는 대통령)	
비상임이사	주무장관	주무장관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감독 : 에드워드 즈윅 출연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지몬 훈수, 제니퍼 코넬리

다이아몬드 '희소성'의 신화

박일한 파이낸셜뉴스 기자

「경제in시네마」, 「생각이 팡팡 튀는 팝콘리더십」 저자



‘다이아몬드’는 ‘물’과 함께 ‘가치’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경제학에서 가치란 단순히 중요하거나 유용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일 만큼 중요하지만 가치가 거의 없는 반면, 다이아몬드는 쓰임새가 거의 없는 데 비해 가치는 매우 높다. 왜 그럴까?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희소성’에서 찾는다. 물은 유용하지만 충분한 반면, 다이아몬드는 원하는 사람들에 비해 그 양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희소성의 원칙’은 경제학에서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경제학이 ‘한정된 자원’(희소성)을 전제로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의 방법을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희소성은 상대적 개념이다. 희소하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아무리 많은 것도 수요가 더 많으면 상대적으로 희소해진다. 그렇다면 희소성도 충분히 조작 가능한 기준이 된다. 인간의 경제적 선택의 기준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2006년)에서는 이 점이 뚜렷이 제시된다. 영화는 다이아몬드 생산지역인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원주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이아몬드 산업은 어떻게 폭리를 취하는지 보여준다.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반군은 무기 구입을 위해 지역 원주민들을 살육하고, 강제 동원해 다이아몬드를 생산한다. 이렇게 캐낸 다이아몬드는 밀매돼 다국적 다이아몬드사를 통해 고가에 팔린다. 고가에 팔리는 다이아몬드 수요가 결국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야기다.

영화 속에서 기자인 매디 보웬(제니퍼 코넬리)이 다이아몬드 밀수거래인인 아처(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도덕적으로 찢리지 않느냐?”고 공격하자, 아처가 우습다는 표정으로 하는

말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당신네도 나처럼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팔고 있어요. 내가 밀매한 다이아몬드는 당신네들 잡지에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낭만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여자들의 환상을 부추겨 판매되니까요. 또 다이아몬드 광고는 어땠고요.”

언론이 광고를 통해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망을 자극해 수요를 늘려 다이아몬드 유통에 기여했다는 지적인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다국적기업인 드비어스사가 성공시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광고 문구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이다. 이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드비어스사는 ‘다이아몬드=영원=사랑’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결혼식에 반드시 필요한 징표로서 이미지를 굳힌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사실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단단해서 물건을 자르는 데나 유용했던 물질에 불과했다. 하지만 100년간 지속된 광고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욕망을 창출했고, 다이아몬드 공급이 그에 따르지 못하면서 희소성은 더욱 커졌다. 가격은 자연스럽게 급등했다.

영화에서 아처가 폭로한 다국적 다이

아몬드사의 사업 방법은 대규모로 다이아몬드를 구매해 지하 창고에 쌓아두면서 공급을 관리한다. 너무 많이 풀리면 가격이 내려가므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세가 안정되면 조금씩만 물건을 풀어 놓는다. 이 이야기 역시 현실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레그 캠벨의 <다이아몬드 잔혹사>에 따르면 드비어스사는 다이아몬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꾸준히 저가에 물건을 사들이고, 공급을 조절한다. 판매할 때는 원산지 판매가격보다 무려 백 배 이상 값을 높이기도 한다.

결국 ‘다이아몬드’로 대표되는 희소성이란 것이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들어낸 신화라는 이야기다. 경제의 논리는 이렇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산물이다. ■

※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율·책임 경영 유도해 나가야

과도한 내·외부 감독 기능 강화는 책임경영체계를 흔들 수 있어.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에서도 핵심적 사항에 평가를 한정해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jkkim@snu.ac.kr)

- 영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 美 하버드대 행정학 박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센터 부소장

일 반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성 발생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 운영의 특성상 독점적인 산업구조가 조성되고 있다. 둘째,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관계로 소유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리인의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정치집단과 주무부처의 개입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정치적인 합리성에 의하여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공공기관인 관계로 파산의 가능성이 없어 '연성예산제약'에 인해 비용절감 등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효과적인 감시·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독점성에 대한 문제는 산업의 구조개혁 또는 진입장벽 폐지 및 경쟁 허용 등의 자유화조치를 통하여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대리인의 문제는 소유권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영평가를 통한 명확한 보상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의 문제는 다양한 '탈정치화

프로그램'을 통한 주무부처 및 정치권의 개입 축소를 명문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는 정부의 보조금 축소 및 기관 폐쇄 등을 통한 '강성예산제약' 부여를 통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 내·외부 경영 및 감시감독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체계적인 공공기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기관법')은 크게 공공기관의 범위설정 및 유형분류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내·외부 경영 및 감시감독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하여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임원인사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은 위에서 언급한 소유권 및 대리인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산업정책과 관리정책의 혼재에 대한 문제, 내·외부 경영 및 감시감독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 기준으로 공공기관 분류해야

'공공기관법'은 과거 불분명한 기준 및 개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공공기관을 UN 및 OECD 등의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주를 지정하고, 이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다. 공공기관 지정 및 기관유형 분류에 있어 일부 미해결된 과제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개별기관의 입장에서 감독 및 평가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positioning'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유형을 분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지정 및 분류작업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부 금융기관 및 언론공기업 등은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법'의 기본관리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의 규모가 큰 자회사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시행령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법'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 내·외부 지배구조의 개혁이다. 특히 과거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이사회와 책임을 강화한 점은 기관 내부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를 통한 내부 경영·감독기능의 강화는 이론적으로 외부 평가·감사보다 우월한 점이 많으나 과도한 내·외부 감독 기능의 강화는 오히려 책임경영체계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량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부적 요인이 증가할 경우 외부의 감사 및 평가를 줄여 보다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 비상임 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비상임이사의 선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공공기관법'에서는 전문성 있는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보다는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특히 공기업의 경우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을 특정 정책의 (집행)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고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사업 및 규제에 대한 기능과 소유권(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일원화는 일관성 있는 ‘범정부적’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제도개선으로 판단된다.

과거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및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일원화를 시도한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기획예산처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공공기관의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선조치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운영위원회 등의 통합을 통한 관리상의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는 점도 추가적인 장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공공기관법’은 모든 기관에 대한 통합경영공시를 의무화하였으나 국민적 관심사항과 경영 현황 및 생산성 등의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공시의무사항’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관 유형 및 특성을 감안한 경영평가편람 작성이 중요하며 평가에 따른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경영의 핵심적 사항에 평가를 한정시킴으로써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을 주무부처에서 기관장 또는 운영위로 바꾼 점은 긍정적인 개선조치 중 하나이다. 특히 공기업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기관장에 부여한 것은 기관장의 경영권 및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개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임이사의 임기를 기존의 3년에서 ‘2년+1년’으로 바꾼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1년 단위의 연임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운영에 있어 그 법률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시스템적 개혁 필요해

‘공공기관법’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범정부적이며 일관성 있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거 비판대상이었던 공공기관의 운영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정책’이라는 타율적인 접근 방법과 더불어 기관장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기초를 보장할 수 있는 자발적인 접근방식이 동시에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한 차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변화보다 끊임없는 시스템적 혁신이 요구된다. 사진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열린 새 1만원권 시연회

별화된 보상 및 연임 그리고 우수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 등의 유인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예산처로 공공기관의 관리가 집중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 주무부처 및 이해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될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점진적인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에 옮겨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개혁보다는 끊임없는 시스템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지수'는 몇 점?

주관적 행복감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학이 사람의 행복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도 무리다. 하지만 OECD 조사 등에 따르면 경제적 지표인 소득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문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정답은 호주 부근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트(인구 21만명 규모)이다. 물론 이는 지난해 영국 신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발표한 '행복지수'(happiness index)에 따랐을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178개국 가운데 102위에 그쳤다. 행복이 국가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남태평양 작은 섬이 가장 행복한 나라?

이 조사는 삶의 만족도, 평균 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을 종합해 행복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가 낮은 행복지수를 보인 것은 IMF 이후 핏박해진 삶의 여건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 사용되는 바람에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지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통지수'(misery index)라는 것이 있다. 이 지수는 경제적 측면만을 반영한 것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수치를 나타낸다. 고통지수가 급격히 나빠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이 이 지수의 체감도를 악화시켰을 가

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도 잘 모르는 나라가 최고의 행복 국가인 점에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행복이 주관적 측면의 만족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객관적으로도 높은 질적 만족을 누린다고는 할 수 없다.

바누아트는 자연적으로 나는 열매나 채취물이 많아 먹고 지내기는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경제'할 필요성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는 만큼 굳

이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경제적 유인이 없어 예전과 거의 비슷한 삶을 영위한다. 행복이 아무리 주관적 판단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상대성도 중요하다. 자신 주변의 준거 집단들이 모두 고만고만한 삶을 누린다는 점에서 행복의 상대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자신의 이상과 기대는 물론 후세의 희망과 꿈을 키우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반문해 보고 싶다.

지난해 말 영국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특집과 표지 기사로 '행복'을 다뤘다. 자본주의가 물질적 풍요와 부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에게 행복할 기회와 불행할 자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주간지는 최근 일고 있는 "경제학이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책임져야 한다('행복 경제학')는 입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과거의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해왔다. 초기에 소수만이 누리던 제품이 이제는 일반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된 것이 많다. 골프나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이지만, 스타킹 한 켤레를 사기 위해서는 1세기 전인 1900년은 약 1시간 40분의 노동을 투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요즘은 15분 정도만 투입하면 족하다. 닭고기 튀김은 1919년 2시간 반을 투입해야 했지만 요즘은 10분 정도면 족하다. 핸드폰도 1980년대 중반에는 450시간이 넘는 노동을 요구했지만, 20년 후인 요즘은 8시간 노동이면 족하다고 한다. 해당 제품의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생활이 엄청나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행복 경제학에서는 레저를 즐기고 일을 덜 하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이 일이라는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보다 일하지 않는 노인들이 더 일찍 사망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행복 경제학은 또한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을 비판한다. 그렇다면 바누아트처럼 평생을 특별하거나 큰 변화 없는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정체된 사회는 일부 기득권층만을 이롭게 하고, 이들의 특권을 위해 물자와 자원이 움직이게 된다. 잘못되면 계급의 고착화가 심화될 수 있다. 성장하는 국가는 고착화된 계급을 타파할 수 있다. 이런 사회라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실현시켜 갈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가 성장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제공해야 한다고 자본주의를 헐뜯어서도, 너무 과도한 짐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더 나은 생활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지

만, 행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일인당 GDP와 비례

OECD는 지난해 말, *Going for Growth*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웰빙의 대안적 측정'을



일러스트 권은정

다루고 있다. 결론은 웰빙(행복)은 다양한 차원을 갖고 있어 금전적 측면만을 고려한 경제적 지표로 측정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 예를 들면 깨끗한 환경, 더 많은 교육 등 상대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거나 창조할 수 있는 특정 사회적 조건들이 대체적으로 1인당 GDP와 비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GDP보다는 웰빙 개념이 더 근본적 목표임은 틀림없다. GDP가 갖는 한계들도 있다. GDP는 생산 개념인데 웰빙은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의존적이다. 사회적으로 '나쁜 재화'(bad goods)의 생산을 배제하지 않

는다. GDP는 미래 세대에 행복과 직결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을 무시한다. GDP는 사회적 가치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레저를 포함하지 않는다. GDP는 소득분배 상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OECD 회원국 국민들이 응답한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은 대체적으로 1인당 GDP 규모와 비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제까지 행복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경제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내용을 종합하면, 주관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지표는 금전적 요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금전적 요인만으로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도 객관성을 갖기 어렵다. 아울러

경제학이 사람의 행복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경제적 지표인 소득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실로 다양하기 그지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연구는 직업의 종류나 실업 상태의 유무, 가족 간 유대관계 정도, 건강(정상 혈압과 행복 간 비례적 관계를 규명)과 교육, 소득분배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국민들의 행복 측정은 GDP와 같은 경제 변수를 포함하되 다른 변수들을 보완해야만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김진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자료개발팀장
(jykim@kdi.re.kr)



가파른 삶과 세월의 절규

고복수의 '사막의 한'

자고 나도 사막 길 꿈속에도 사막 길
 사막은 영원의 길 고달픈 나그네 길
 낙타 등에 꿈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면
 황혼의 지평선에 석양도 애달파라

저 언덕 넘어갈까 끝없는 사막의 길
 노을마저 지면은 둘 곳 없는 이 마음
 떠나올 때 느끼며 눈물 뿌린 그대는
 오늘밤 어느 곳에 무슨 꿈을 꾸는고

사막에 달이 뜨면 천지는 황막한데
 끝없는 지평선도 안개 속에 싸이면
 낙타도 고향 그려 긴 한숨만 쉬고
 새벽 이슬 촉촉이 옷깃을 적시우네



때로 한 편의 시보다 유행가 가사가 한층 절실한 느낌으로 가슴 속에 다가올 때가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오늘도 안간힘을 쓰며 땀흘리는 인간의 삶은 온갖 힘겨운 부담과 피로가 쌓여서 한낱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우리의 지난 시절은 험난했다. 봉건왕조의 우울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시점에 우리 겨레는 제국주의 침탈이라는 새로운 질곡에 신음해야만 했다. 그 제국주의는 고무신과 안경, 혹은 석유와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명종의 얼굴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이자 바닥 모를 높이였다.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불안의 밑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삶의 갈피를 잃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기도 전에 가혹한 수탈과 유린이 시작된 것이다. 자고 나면 밝은 아침이 와야 마땅한데 광명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 없고, 눈앞엔 여전히 고달픈 암흑천지였다.

고복수가 처연한 성음으로 불렀던 '사막의 길'(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은 바로 이러한 세월의 암담함을 상징적으로 빗대어 표현했던 노래다.

1930년대 중반 고복수는 경남 울산에서 전국가요콩쿨 예선에 뽑히긴 했지만 서울로 갈 여비가 없었다. 가수로서 출세를 꿈꾸던 청년 고복수에겐 이것저것 물불을 가릴 틈이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잠들었을 때 금고에서 60원을 몰래 꺼내어 달아났고, 서울 본선에서 기어 이 1등으로 뽑혔다. 그 후 고복수의 대표적 출세작이자 우리 민족의 노래라 할 수 있는 '타향살이'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잇따라 '사막의 한'이 또 대박을 터뜨렸다. 오케레코드사에서는 무려 2천원이란 거금을 전속축하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소학교 교사의 월급이 46원이었으니 참 대단한 액수라 하겠다.

고복수는 이 돈을 들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무릎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죄를 빌었다. 고복수의 부친은 돈을 훔쳐 달아난 아들에게 패심한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지만 가수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 속으로 너무나 흐뭇했다. 그리하여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잔치를 열었다. 얼마나 흥겨운 잔치였을까?

오늘은 이런 사연을 생각하면서 '사막의 한'을 3절까지 소리내어 불러보면 어떨까 싶다. 옛 노래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읊조리듯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

1950년 경북 김천 출생
 동아일보신춘문에 시 당선(1973)
 동아일보신춘문에 문학평론 당선(1989)
 시집 『미스 사이공』 등 저서 40권 발간
 난고문학상, 시와시학상 등을 수상
 현재 영남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Interview

“대중가요에는 우리네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 국 제일의 가수는? 조용필. 트로트의 여왕은? 이미자. 그럼 한국 최고의 ‘노래대결’ 왕은? 이동순이다.

1980년 후반 전채린(전혜린의 동생) 충북대 불문과 교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이고, 징그러워”란 말을 끝으로 동트는 새벽 시인 김지하는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다. 노래대결을 좋아한 김지하가 수소문 끝에 이동순(당시 충북대 국문과 교수)을 찾아와 별인 시합은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이어졌고, 결국 김지하가 두 손을 들었다. 심판은 소설가 김성동과 철학자 윤구병(당시 충북대 철학과 교수). 2절까지 부르는 것이 기본이고, 1절까지 부르면 -1점, 3절까지 부르면 +1점을 매기기로 하고 별인 치열한 한판이었다.

가왕 조용필을 노래시합으로 이긴 뒤 의기양양하게 찾아 온 김지하의 코를 납작케 한 이동순 교수(영남대 국문과, 57세)는 ‘걸어 다니는 노래방’으로 통한다. 지금도 가사를 보지 않고 3백여 곡을 3절까지 부를 수 있다. 노래방 기기에 의지해야 노래할 수 있는 요즘 세태에 드문 일이다. 그것도 죄다 중학생 때 외운 것이다. 최근 펴낸 산문집 ‘번지 없는 주말’ (도서출판 선)도 대중가요에 대한 그

의 사랑과 애착이 짙게 담긴 책이다. 그가 이달부터 『나라경제』에 ‘옛노래에 담긴 그 시절 우리 생활’이란 칼럼으로 가요가 한국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노래에 담긴 그 시대의 곤고한 삶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목포의 눈물, 봄날은 간다, 대전부르스에서 섬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창 밖의 여자까지, 또 고복수·남인수·백년설·이난영·김순남·이미자·조용필 등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와 가수들의 사연과 이면사도 소개할 예정이다.

“태어난 지 꼭 열 달 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란 말이 들어가는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던 유년시절, 가요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에 대한 상상을 가능케 한 유일한 도구이자 위안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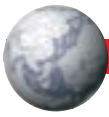
이 교수는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시당선으로 데뷔한 널리 알려진 시인. 정통 문인이자 국문학자가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중음악이란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노래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만 본격적인 공부는 대중예술을 깔보는 데 대한 저항감으로 시작

했습니다. 문학이든 가요든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는 고립되거나 소외된 적이 없습니다. 대중예술을 깔보는 우리 사회의 천민적인 분위기가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판따라’로 불리고 있는 데 모욕감을 느낀다며 “대중가요만큼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칼럼을 통해 노래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나아가 그 시절의 나라경제는 어땠는지도 짚어볼 것이라는 게 그의 다짐. 아코디언을 수준급으로 연주하는 아마추어 악사이기도 하다. ■

글 김동률 KDI 연구위원
 사진 공은주 나라경제 기자





기상재난의 시대, 환경과 경제 모두를 살리려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각종 기상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대책 중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요즘 이곳 파리 시민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날씨이다. 지난 겨울은 이상난동(異狀暖冬) 때문에 눈이 오지 않아 알프스 등에서 스키를 즐기는 파리 시민들을 무척 우울하게 했다. 게다가 파리 시민들은 올 여름이 역사상 가장 무더울 것이라는 소식에 4년 전 폭서(暴暑)로 만 명이나 죽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라틴민족답게 열정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을 두고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주장과 가끔씩 나타나는 자연스런 기상이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여 왔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국제적 압력 거세

그런데 이러한 파리 시민들의 첨예한 논쟁에 대해 명쾌한 심판을 내려준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다. 지난 2월 기후변화의 과학적 연구에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제 4차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가 90% 이상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사용 등과 같은 인간 활동 때문이고, 최근 유럽의 이상난동,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 태풍 등 각종 기상재난도 지구온난화의 결과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50년 기상관측 이

래 가장 따뜻했던 12년 중 최근 11년이 포함될 정도로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향후 100년 동안 지구온도는 1.8~4.0도 오르고, 이러한 온도 상승에 따라 그린란드와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은 최고 58cm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카리바시 같은 산호섬 국가와 상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들이 물에 잠겨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같은 남부 유럽에서는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오고, 영국과 북부 유럽 국가들은 여름에는 가뭄, 겨울에는 폭풍우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의 방향 및 강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제정하여 선진 35개국에 대해 2012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의 불참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 대한 반응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해 신속하고도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처해 온 EU는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후속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까지 자동차에

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18% 줄이겠다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보고서 발표로 환경론자들의 명분과 입지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미국 등 기후변화에 대해 미온적인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서도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파상공세와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게 감축의무를 부담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이고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있



지난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물에 잠긴 집에서 구조된 시민들이 보트로 이동하는 모습. 이러한 기상재난은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벼 수확량이 감소되며, 가뭄과 홍수 피해가 잦아지는 등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기후재난이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당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요청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스텐 보고서가 밝혔

이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경제 총생산의 20%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기후변화대책을 미리 추진할 경우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제 부담을 이유로 지구를 살리자는 국제사회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기에는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배출권거래제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경제적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대책이 무조건 경제적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수익창출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OECD는 배출권거래제·환경세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할 경우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게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청정기술을 통해 배분된 양보다 적게 배출하는 환경친화기업은 그 차이만큼의 배출권을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오염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적인 유인책이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이를 통한 배출권 판매로 경제적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EU·영국·호주 등은 몇 년 전부터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미국조차 민간차원에서 시카고 기



신수원

지난 2월,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구온난화로 한국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 뒤 열대과일로 차례를 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후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시장 규모는 2005년 110억달러 규모에서 작년 215억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해의 약 세 배인 6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해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이에 따른 배출권을 판매해 경제적 이득도 챙기는, 소위 '깡 먹고 알 먹는'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청정개발체제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면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선진국들은 공해산업이 많은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중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 이득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이 변화될 조짐이 여러 곳

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의회 연두회견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향후 10년간 석유 사용량을 20% 절감하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주정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산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연방 정부에 대해 기후변화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EU 등 경쟁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고,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등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대선 후보들은 민주당·공화당 후보를 막론하고 기후변화대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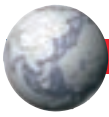
올해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적용할 네 번째 범정부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책이 최근에 변화되어 가는 세계

각국의 정책 동향을 반영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지구를 살리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OECD에서 강조하듯이 기업들이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등 경제적 유인책들이 강화되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대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



남광희
駐OECD대표부
1등 서기관
(khnam03@mofat.go.kr)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견이며, 駐OECD대표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협상의 볼모된 NAMA 협상 타협점 모색 중

NAMA(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의 부진은 개도국들이 농업협상을 우선시해 농업협상의 결과를 NAMA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전략 때문. 핵심이슈 및 농업 분야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질 경우 NAMA 이슈도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 7월 중단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4개월 뒤인 11월 재개되었다. 2001년 시작된 DDA 협상은 협상 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어떤 결론이라도 도출해야 하는 데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종착점이 가까워졌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이 올해 7월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자무역체제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따라 좌우될 수는 없지만, 국제무역체제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협상 참여 여부가 DDA 협상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어 7월에 종료되는 TPA가 DDA 협상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현행 TPA하에서 미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해 'yes or no'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의회가 행정부측 협상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체되어 온 DDA 협상이 미국의 TPA 종료라는 복병을 만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설정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가 DDA 협상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점점 닫히고 있는 기회의 창에 맞서 다자무역체제의 부활을 위한 물밑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EC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 및 다자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네바에 있는 협상 실무자들은 핵심 이슈의 대타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분야별 세부적인 기술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협상 진전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NAMA 협상 부진, 농업협상 우선 추세 때문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은 농업을 제외한 모든 재화(공산품, 수산물·임산물 분야)의 관세감축 또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개선을 도모하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DDA 협상의 기본 지침격인 도하각료회의 선언문에 명시된 바대로, 'NAMA 협상은 모든 비농산물 및 환경상품을 협상 대상으로 하면서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관세정점 [tariff peak, 특정품목의 관세가 평균적인 관세수준보다 높은 경우로, 국제기준(OECD)에 의하면 개별 품목 관세율이 15%를 넘거나,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인 경우를 지칭], 고관세 (high tariff, 관세율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며 대체로 15% 이상의 관세율을 고관세라 지칭),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에 따라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세율 체계로, 완제품 수입을 막기 위해 해당 산업에서 사용하는 수입원료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완제품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

세구조)를 포함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를 협상 목표로 하도록 하고 있다.

NAMA 협상은 2002년 8월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4년 7월 기본골격 합의(7월 패키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켜 왔다. 그러나 2006년 6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간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NAMA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DDA 협상 전반의 중단이라는 파국에 맞물려 NAMA 협상도 중단되었다.

필자 판단으로 그간 NAMA 협상을 포함해 DDA 협상 전반에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선 협상 전반에 걸쳐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이다. 브라질·인도 등이 개도국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협상 전반에 걸쳐 개도국 또는 자국의 협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협보다는 선진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내 협상을 선도할 구심점의 부재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국내 정치 상황으로 DDA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EC의 경우도 회원국 확대로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회원국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세적 입장에서만 협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산품 개방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NAMA 협상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사진은 독일의 철강 공장

셋째, UR 등 기존 라운드를 통해 상당 수준의 자유화가 달성되어 회원국이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이 줄어든 점도 부진 이유로 들 수 있다. 현재 DDA 협상에서 주요 협상 대상은 기존 라운드를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민감품목 시장접근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감축해야 하는 관세수준은 국내산업 보호라는 측면 등의 이유에서 더 이상 낮추기 곤란한 수준까지 관세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기도 하다.

NAMA 협상의 부진은 이러한 협상 전반의 지연 사유에 더하여 개도국을 중심으로 농업협상의 결과를 NAMA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부정적 연계(negative linkage) 전략에서 기인하고 있다.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농업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NAMA 협

상에서 적게 양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NAMA 협상은 농업과 더불어 DDA 협상의 주요 협상 분야이나, 최근 협상에서는 농업협상 이슈가 주로 논의되고 NAMA 협상이 농업협상의 종속변수로 취급되고 있고, 개도국은 농업협상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NAMA 협상의 발언 수위와 양보 정도를 조절하고 있다. NAMA 협상이 농업협상의 볼모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농업 분야가 개도국의 수출 관심분야이고 다른 분야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비농산물이 전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산품이 개방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NAMA 협

상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NAMA 협상에서의 진전이 여타 협상 분야의 진전보다 '새로운 무역기회 창출'과 '개발'이라는 DDA 협상목표 달성에 부합하다는 점에 유념하여 NAMA 협상을 통해 농업 등 여타 분야의 협상을 선도해 나가는 긍정적 연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관세장벽 해소 등이 핵심이슈

어려운 NAMA 협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그간 노력으로 NAMA 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개별 이슈별 회원국 간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전 덕분에 핵심 이슈 또는 농업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NAMA 이슈별로 회원국 간 '주고 받기식'의 조정이 쉽게 이



루어지고 NAMA 이슈 모두에 대해 실타래 풀리듯 쉽게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해지고 있다.

NAMA 협상 관련 협상지침과 협상구조를 감안할 때 NAMA 이슈는 크게 관세장벽 해소, 비관세장벽 해소 및 개발 목표와 연계된 개도국 신축성 부여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관세장벽 해소 문제는 다시 관세를 어떻게 일률적으로 감축할지 방법론에 관련된 관세감축공식, 미양허품목을 양허품목으로 전환하고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무역축진권한이 7월에 만료돼 올해 상반기가 DDA 협상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트럭·승용차들

미양허품목 처리 문제,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분야별 자유화 (sectoral) 논의로 세분화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는 현재 발굴된 비관세장벽에 대해 다자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안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차원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개도국 신축성 이슈는 다시 모든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슈와 특정 개도국 그룹에만 적용되는 특정 그룹 이슈로 구별할 수 있다. WTO 협상은 전반적으로 자유화 및 개방화를 위한 협상이지만, 개도국 신축성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DDA 협상 출범 당시 새로운 무역기회 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무역기회 창출이 '개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협상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것에서 기인한다. NAMA 협상에서도 '개발'을 고려한 시장접근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슈별로 개도국 신

축성 부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반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신축성 이슈의 경우 관세감축공식 적용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덜 감축하는 방안(관세감축공식 계수 이슈), 관세감축공식 적용 관련 개도국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논의(7월 패키지 para 8 이슈), sectoral 논의에서 개도국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는 문제(개도국 S&D 부여 이슈)로 세분할 수 있다.

특정 개도국 그룹에 적용되는 신축성은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반 개도국과 다른 별도의 특별 대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정 개도국 그룹 이슈는 최빈개도국(LDCs), 양허수준이 낮은 국가(para 6 국가), 신규 가입국(RAMs), 소규모경제국가(SVEs) 그리고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피해를 보는 국가군으로 분류되어 논의되고 있다.

상기 NAMA 이슈들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이슈(core issue), 구조 이슈 (architecture), 기술적 이슈 및 기타 이슈

로 분류되었고, 협상 진전 단계별로 적합한 이슈군을 선정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핵심 이슈에 포함되는 이슈는 관세감축공식, para 8 관련 개도국 신축성, 미양허품목 처리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핵심 이슈로 분류된 이유는 NAMA 협상의 목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주고 농업협상의 결과와도 직접 관련된 이슈라는 점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이슈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지에 따른 대타협이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안창국
駐제네바대표부 재경관보
(zest88@naver.com)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駐제네바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 해외투자 확대 정책에 기대 반 우려 반

아시아에 달리가 넘쳐나고 있다. 각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경쟁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수출 호황으로 경상흑자가 늘어난 것 등이 그 이유다. 급기야 <월스트리트저널>(2월 26일자)은 아시아의 과도한 외환보유고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그 해법으로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한국처럼 개인의 해외투자를 풀어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지난 1월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외환 초과공급으로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유출을 촉진해 보겠다는 게 그 취지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해외 유력 외신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다. 외신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하나는 외화유출이 촉진돼 한국정부가 기대하는 환율하락, 즉 원화절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돼 국내 부동산 투기가 억제될 수 있을지 여부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은 전자인 환율 문제이다.

사실 한국정부 스스로도 밝혔듯이 이번 대책에 따른 환율안정 효과에 거는 기대가 높다.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개입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외신들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개입이 곧바로 자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자국 내 부정적 시각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한국정부의 원화절상 억제 노력에 고운

시선을 보낼 리 없었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1월 16일자)는 이번 대책이 기대했던 것보다 제한적이어서 단기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도 이번 조치로 해외투자가 즉각적으로 급증하거나 원화절상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보도했다. 더 노골적으로, 싱가포르의 <비즈니스타임스>(2월 28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아시아 각국에서 정책입안자



들이 수출업체들을 돕기 위해 자국통화 절상 억제 노력을 펼치면서 자본유출 촉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각국 정부가 개입이나 자본통제를 통해서 통화절상을 억제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자본유출 촉진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영미권에 득이 될 한국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는 점이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1월 16일자)은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이번 대책이 한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을 해외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1월 24일자 기사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국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가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가 비주거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종전의 1인당 1백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벽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호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신들이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신보도에 나타난 내용 자체보다는 행간의 의미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다른 외신들의 전반적인 환영 분위기와는 달리,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가 과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블룸버그통신>(3월 6일)의 보도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즉, 자본유출의 증가로 올해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경제가 냉각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제 완화를 악용해 '묻지마 투자' 등 불요불급한 외화차입이 나타나거나 일부 국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해외부동산 투자 과열을 경고하는 <블룸버그통신>의 우려의 목소리는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다.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한 외신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외신의 보도 관점은 자국의 이해와 맞물렸을 수도 있으므로 내용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행간을 정확하게 읽어 시사점을 얻는 혜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

김진미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책임전문원 (jinmiism@kdi.re.kr)



국제기구 진출? 제2외국어는 기본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2개국어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구사해야.
인턴십 통해 경력 쌓아 업무·환경에 익숙하면 유리해

필자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기술자문역으로 짐바브웨 잠사업 개발을 위한 현지 방문차 처음으로 FAO에 발을 들여 놓은 해가 1985년이니,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22년이 되어가는 셈이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0년 이전에, 1년에 한두 차례 1~2개월씩 자문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한 기간까지 통산 11년 동안 41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지역 분포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19, 아프리카 7, 아메리카 4, 동유럽·중앙아시아 11개국이며, 189개 회원국 중 90개국의 농촌·농업개발 사업에 관여하였다.

FAO에 관한 일반 자료라면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사항에 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과 FAO의 구조조정에 따른 활동 방향과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FAO 진출에 관하여 살펴본다.

20~40여 명의 전문가들이 매년 이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나, 근간 FAO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FAO에서도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지역 및 국가적 분포를 정기적으로 공개 발표하며,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내고 있는 분담금의 수준으로는 13~18명

이 채용될 지분이 있으나, 현재 FAO에 임용되어 일하고 있는 전문직 정규직원 수는 총 1,212명 중 단 4명으로, FAO 창설 이래 189개 회원국 중 21개국이 속해 있는 'under represented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다른 유엔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FAO에서도 제몫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 외 5~6명은 지역 분포지수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시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관련분야의 고급 인적자원은 국제기구 쪽으로는 관심이 적거나 혹은 지원자 개개인의 자질이 FAO가 필요로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와 후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가의 위상은 물론이며 국가경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우리나라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정도가 유엔을 비롯한 여타 국제기구 전반에 걸쳐서 좀처럼 향상되고 있지 않다는, 그 근본 원인이 될만한 제도 및 절차상의 제반 요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교육제도와 사전준비 및 임용절차에 대한 홍보, 국가적 후원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2외국어 교육이다. FAO의 공용어는 영어·불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로 5개 국어인데, 보통 중상위 전문직급(P4, P5)의 채용공고에는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2개 국어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C급(working level)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 Vacancy Announcement로 지원서 마감 3~6개월

전에 올리는데, 1차 응모자수가 보통 100~400명 수준이고, 서류심사를 거쳐 50명 내외로 좁힌다. 다시 선발위원회의 심층심사로 10여 명을 추려내고, 마지막 단계인 후보 5~6명 선에 이르면 전화나 화상 인터뷰를 치르게 된다. 이때 응모자가 선택한 제2국어로 예고 없이 문답하는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었다.

둘째, 응모부서와의 인적관계 형성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인적 교류 없이 처음부터 인터넷 공개모집에만 응모해서 선발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임용되자마자 바로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인턴십에 해당하는 UN Volunteer나 Visiting Scientist, Authorship, Resource Person, Facilitator, Expert, Consultant 등의 단기 계약직에 3~10년간 경력을 통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와 조직 환경에 얼마나 익숙한가가 선발의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일단 한자릿수의 후보자 명단에 이르면, 해당 정부의 로비활동의 수준을 통하여 지원자에 대한 신분 확인과 정부 후원의 정도를 가늠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마땅한 정부 후원을 받으려면 지원자가 응모사실과 선발단계 등을 해당 부서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한자릿수 명단에 이른 후보자의 기술적 자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누가 낙점되는가는 정부 출연후원금이나 분담금의 수준, 임원 선거, 상위직 채용 등의 정책적·외교적·정치적 사안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넷째, 국제기구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베를린에서 열린 중동평화회담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고려하는 임용된 후의 신분이다. 국제기구로의 진출은 상당기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요하므로 대개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니, 경력을 쌓을 목적으로 단기 계약직 등에 지원하는 경우 현직 유지에 부담이 되거나 앓을까 걱정하게 되며 정규직으로 임용된 후의 신분에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후원 대책이 서지 않고는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예를 들어, 단기 지원의 경우 회사 내에서 근무평가에 있어서 가산점을 인정하거나 정규직 국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신분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FAO의 후속 인적자원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인사제도를 소개한다. 일종의 인턴제도에 속하는 종류로는 UN Volunteer/Internship(UNV), Junior/Young

Professional Officer(JPO·YPO), Associate Professional Officer(APO) 제도가 있는데, UNV는 대개 학사·석사 과정을 마치거나 석사과정 중에 전문을 넓히는 정도이며 FAO에서의 재정지원은 전무하다. JPO나 YPO는 보통 석·박사 과정 중에 특정 분야의 업무에 경험을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비와 체재비 그리고 약간의 급료가 지급된다.

APO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지금까지 관련 정부기관에 현직으로 있는 사람이 2~3년간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서, 소속기관에서 채용 전액을 출연한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래 20여 년간 20여 명의 APO가 다녀갔으나 이들 중 단 한 명도 정규직원 채용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 제도가 과연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주된 원인의 하나는 중·하급의 젊은 직원이나

부서 외부로부터 인재를 발굴하여 파견하지 못하고 사무관이나 서기관 급의 현직원을 파견하였으니, 국제기구에서의 근무경험을 쌓는다는 명분 이외에 국제기구 진출인력을 육성한다는 FAO 본래의 목적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 말이 있다. 끊임없는 준비와 성실함만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관심이 있고 열정이 함께 한다면 국제기구의 관문은 그리 좁지만은 않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

이호주 FAO 본부 농산업수석담당관
(hzleabio@fao.org)



34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으로는 의료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넓은 의료법 수술대에 오르다

기존 의료법은 과도한 규제로 의료계 발전을 가로막아.

의료법 전면 개정 통해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 늘릴 것

의료법은 의료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로 1951년에 「국민의료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수립 이후 22번째 만들어진 역사가 아주 오래된 법률이다. 1962년에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1973년에 전면 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3년의 전면개정 이후 현재까지 34년간 법률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28회에 걸쳐 부분개정되는 데 그쳤고,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현재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 외에 법률체계에 있어서도 가지변호가 붙어 있는 조문이 24개에 이르고, 전문의·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관

련 규정이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보칙에 규정되어 있는 등 법률의 체계성이 떨어져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30년간 우리의 의료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경제 또한 발전하면서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높아졌음에도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34년 전 만들어진 법률체계로는 이러한 변화된 욕구를 따라가기 매우 어렵게 되어 이제는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할 시점에 다가온 것이다.

이에 넓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넓은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크게 줄여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을 보면 통상적으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내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15명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 입법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유는 의료법의 경우 각 의료단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국민의 의료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각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좀 더 현실에 부합하고 수용성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를 통하여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현행 규정보다 30여개 이상의 조문이 늘어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료법 개

정안의 모든 조문에 대해 완전하게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었다.

이번 전면개정을 통하여 담고자 하는 개정방향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다. 즉,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민원을 제기해왔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둘째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급적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만이 이루어져 전체 법률체계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인 의료법을 만드는 한편,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는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정의 기본방향은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의료법을 만들자는 데 있다.

양·한방 동시진료 등 환자에게 편리해져

이번 개정안 중 국민 편의 차원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가지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양방과 한방은 각각 별도의 병원을 운영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어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각각 찾아야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기관도 양·한방 협진으로 더 좋은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분야는 그 비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나,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병원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에게 진료비용을 알려주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나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질병으로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여 환자가 자기 질병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였다.

프리랜서의사도 진료 가능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의무가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득이 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도 프리랜서 의사로서 여러 병원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임상병리과나 마취과의 경우 많은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으며 진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한 의사 또는 의사·치과의사 등 복수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많

은 복수면허자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소지한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내기 의료인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볼 수 없었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면허증을 발급받기 이전이라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당직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이 의료기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준비과정부터 관련단체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제시되는 어떠한 의견에 대하여도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gikim@mohw.go.kr)



예측불허 글로벌 금융시장 어떻게 봐야 하나

글로벌 자산시장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 특히 부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속속 이어지면서 미국 금융시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요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 금융기관의 낙후는 이미 구문이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나 수익성,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행의 대대적인 기업공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부실을 희석하고, 선진 금융기법으로 난제를 극복하고 싶은 계산이었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신흥시장을 기웃거리던 글로벌 자금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중국공상은행(ICBC)을 비롯한 중국 금융기관의 기업공개에 대해 참여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은행의 자산규모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자본대비 이익률이나 잠재부실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었다는 반성도 동시에 일기 시작했다.

여기에 일본은행의 그리인상과 엔-달러 환율의 반등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환류가 예상되면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것은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철수한 것이 아니라, 향후 그것이 현실화했을 경우에 발생할 손실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

한 선제적 포석이었다. 이것이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린 3대 요인이었다.

돈 빌려 투자해도 이익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왜 금융시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자산시장의 환경이 우리가 조우했던 지난 시절의 어떤 환경과도 일치하지 않는 놀라운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유동성이 선사하는 수익률이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경험칙상 부풀어 오른 유동성은 감소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험적으로는 그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호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골디락스(편집자註 : 경제 상황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즉 건실한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지칭) 등과 같은 산업논리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지금이 거품국면, 혹은 투기국면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대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에 나서는 투자자뿐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일단 '돈을 빌려' 투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또 전세계 부동산 시장의 활황 역시 그렇다. 복잡한 증거를 대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자산시장의 투기심리를 재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변동성이 큰 유가증권 시장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추세 변화가 더딘 부

동산 시장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금의 50%는 대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산시장에서 가지는 함의는 명백하다. 지금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더라도 이자차액을 공제하고도 이익을 내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의 믿음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실 모기지론에서 파산 위험이 증가하고, (엔을) 빌려서 투자하는데도 더 이상 곤란하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빌려서도 이익을 내던 환경에서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투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국면으로 이행된다는 뜻이고, 이쯤 되면 금융자산, 좀 더 크게는 금융회사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금융업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글로벌증시의 움직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국과 미국 증시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흔들릴 때 우리나라 증시는 금융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시작했다. 이 이유를 혹자는 중국 은행들의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한국증시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같은 현상을 두고 미국의 금융주에 대해서는 신용경색을 원인으로 든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부 표면적인 판단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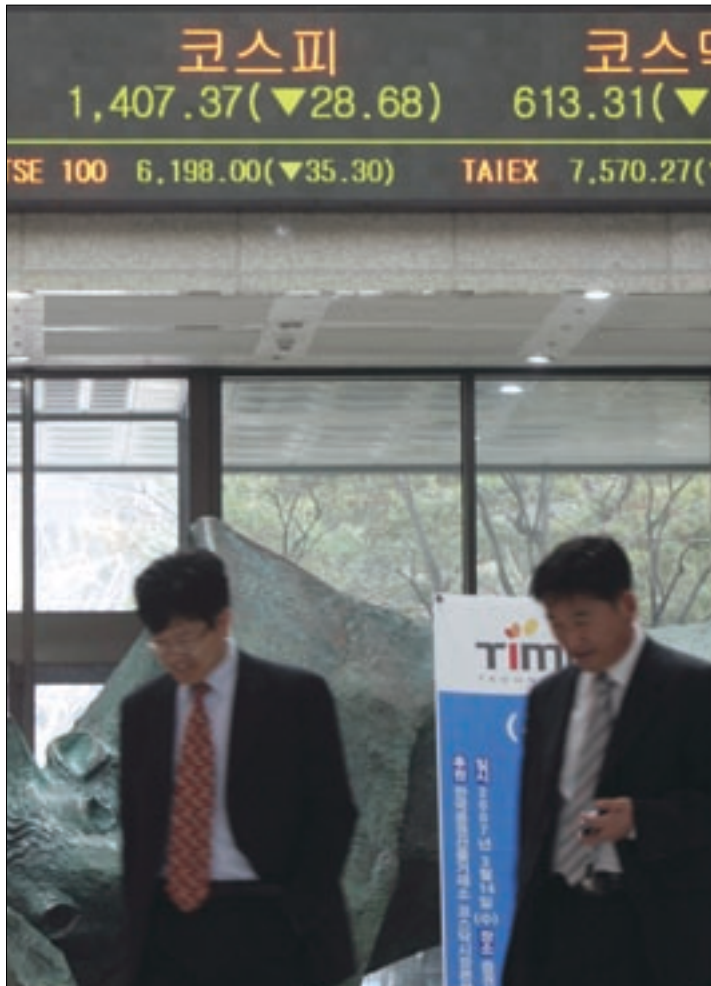
금융산업의 속성은 명료하다. 금융산업은 근로계층의 임금을 모아 산업자본에 빌려주는 것이 본질이다. 때문에 산업자본은 항상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인 임금이나,

1965년생. 영남대 의대 졸. 안동 신세계연합병원장.
 MBN '경제나침반 180도' 진행. 경제전문지 『머니 투데이』 전문위원.
 저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2005).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2006).

※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인 금융기관이나, 당사자인 산업자본이 모두 윈-윈하는 게임이 된다. 때문에 산업자본의 가치는 성장 국면에서 더욱 돋보인다.

산업자본이 이자 이상의 레버리지를 내지 못할 때 금융수요는 줄어든다. 때문에 금융산업은 산업자본의 부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재편, 세계 인구 증가율의 둔화, 2차 산업의 한계성숙 등으로 산업자본이 추가투자를 통해 이자 이상의 레버리지를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경우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금융산업의 위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그 반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잉여자본을 두고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뿐, 잉여자본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신규투자를 억제하면서 감가상각과 회계이익이 증가하고, 결국 신규투자는 없이 배당과 잉여이익은 늘어나는 골든크로스 국면을 맞은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28.69p 하락한 1,407.37로, 코스닥지수가 613.31로 마감된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로비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보다는 잉여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금융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그에 따라 금융산업 자체가 자본조달과 그로 인한 이자수익보

있고(경쟁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시장 확대기), 중국이나 기타 신흥국가의 금융산업은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매력적인 곳은 한국을 비롯해서 2차산업의 완숙기를 막 지난 국가들이고,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과거 한국이 그랬듯이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공산이 크며, 미국·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더 이상의 시장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금융자본이 금융자본에 투자하거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투자하는 형태의 무성생식의 시작국면이다. 같은 관점이라면 삼성이 고민한다는 5~6년후의 문제들도 결국은 레버리지의 중심축이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고민일 것이고, 이제 경제가 좀 더 투명하게 자리를 잡게되면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국의 금융산업은 매력적인 청소년기

금융산업의 돌파구는 여기서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산업자본끼리의 경쟁보다는 잉여자산에 대한 투쟁이 발생하고, 신규투자

다는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산업자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산업은 완숙기에 접어들

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한국시장의 금융산업은 이제 막 청소년기에 들어선 매력적인 대상임이 분명하다. ■

배우자도 고객?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2007년 3월 8일자 모일간지에 급하게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가 올랐다. 이를 본 신문 구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호기심·재미·황당함 등 만감이 교차했으리라 생각된다. 광고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광고주가 구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의미하는 고객이 될 수 있을까?

기업들이 생각하는 고객은 어디까지일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면 고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기업이건 개인이건. 그리고 당장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나중에 구매할 것 같은 사람을 잠재고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앞으로 구매할 사람만 고객일까?

고객을 애인처럼... 관계마케팅 크게 강화

1990년대 말부터 관계마케팅이 새로운 마케팅의 기법으로 부상하여 많은 기업들이 고객관리에 나서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더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주는 등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른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웬만한 기업치고 CRM을 안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NGO(시민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PCRМ(Policy CRM)이라 하여 실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시민단체와 정부기관이 무얼 팔길래 고객들을 관리한다는 말인가? 시민단체는 의견과 생각을 팔고, 정부기관은 정책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판다'의 의미는 꼭 금전적인 교환만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K모 교사. 올 1년은 진학 상담으로 바쁠 것으로 생각된다. K모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누구일까?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원하고자하는 대학교? 그 학생들의 부모님? 학교가 위치한 동네의 주민들? 동료 교사? 이웃한 학교? 교감선생님? 그렇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홍빈장은 고객관리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 '홍빈장'에서 주인공 홍빈장(김주혁 분)은 마을사람 누구라도 고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K모 교사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른바 Stakeholder(이해당사자)가 잠재적으로는 모두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이제는 이미 고객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봐야할 것이다.

수많은 고객과 이해당사자에 둘러싸인 사회

위의 K모 교사의 사례처럼 고객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크게는 소비자라고 알고 있는 외부고객, 조직 내의 동료들인 내부고객

그리고 주주·지역사회·정부기관 등은 모두 조직의 이익에 관련이 있는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의 고객을 세분하면 또다른 형태의 고객들을 찾을 수도 있다.

아들의 생일 선물을 고르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어왔다. 점원은 열심히 아버지에게 두뇌발달에 좋은 장난감을 소개해 주었다. 이 점원의 행동이 아버지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들은 내심 얼마 전 TV광고에서 본 로봇을 사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객, 즉 소비자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사람(Buyer), 사용하는 사람(User), 돈을 지불하는 사람(Payer)으로도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고객이지만 서로 다른 고객이다. 아버지는 Buyer이고 동시에 Payer이며, 아들은 Buyer인 동시에 User이기 때문이다. 장난감 점원은 이들 부자의 Wants(필자註: 마케팅에서 Needs는 일반적인 선택을 의미하지만, Wants는 좀더 구체화된 기호가 가미된 선택을 의미)를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추천하거나 이들 부자의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결국 얼마 전 일간지의 '급 배우자 구인 광고'는 고객을 찾는, 그것도 평생고객을 찾는 광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웬지 모르게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서글픔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회가 계산적으로 바뀌고 각박해져서일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수많은 고객과 이해당사자들에 둘러싸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

글 이윤우 나라경제 기자



(최첨단 산업으로 무장한 깨끗한 환경의 섬) 대만 : ‘Green Silicon Island’를 향하여

조병구

KDI 연구위원
(cbkcho@kdi.re.kr)

- 서울대 사회학과
- 美 University of Illinois, Ph.D.

김우종

KDI 연구원
(wijong@kdi.re.kr)

대만은 오랜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지닌 섬이며, 한편으로 중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12세기 중국대륙에서 넘어온 중국인들이 토착세력을 형성하고 살아오던 대만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청나라와 일본 등 주변 열강의 식민지로서의 시기를 보냈다. 대만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중국에 다시 반환되지만, 이후 중국대륙 공산당과 국민당 간에 발생한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1949년 중국의 국보를 싣고 후퇴하여 대만에 정착하면서 현재의 대만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또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의 미묘한 정치적 관계의 원인이기도 하다.

대만을 장악한 국민당 정부는 적은 인구로 다수를 장악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현 정권에 대한 대항세력을 미리 제거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불만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갔다. 단적인 예로 1949년 발동되었던 계엄령은 1987년까지 무려 38

년 동안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50년대 초반에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는데, 이 개혁에는 대만의 산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권의 유일한 도전 세력으로 파악된 토착지주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1949년 국민당 정부가 중국에서 건너왔을 때, 대만은 설탕과 쌀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농경국가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반세기 동안 대만을 점령했던 일본이 대만의 통신과 교통시스템의 발전을 이끌고 상업과 교육을 육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유산을 통해 국민당은 상대적으로 잘 개발된 경제·사회적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가질 수 있었다. 1949년 중국에서 넘어온 국민당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농업 중심 국가인 대만을 제조업과 수출주도형 산업을 통해 발전시켰으며, 1960년에서 1980년까지 평균 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토지 개혁을 통해 산업화의 기틀을 세운 장개석 국민당 대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강력한 발전기반을 다져 나갔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80년대에는 임금·환율 상승으로 인해

인력 중심의 제조업에서 자본과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는데, 특히 전자제품과 화학제품에 주력하였다. 동시에 신주 과학단지(Hsinchu Science Park)를 건립하여 대만의 IT 하드웨어 산업을 키웠고, 이후 두 개의 하이테크 단지를 만들어 전자기술에 초점을 맞춘 산업발전에 투자하였다. 대만은 현재 IT계열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LCD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자가 되었다.

중소기업 중심의 ‘안정지향적 정책’ 추구

현재의 대만경제를 일군 경제정책적 특징은, 1970년대 후반 대만의 대외적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기인했다. 1970년대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만정부는 정치·경제의 정책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1971년 중국이 대만을 축출하고 UN에 가입함으로써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수난을 겪었고, 더욱이 1975년에는 미국이 대만에서 철수하고 1978년 대만과 단교를 선언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요구되자,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였다.

1949년 중국에서 넘어온 국민당은 농업 중심 국가인 대만을 제조업과 수출주도형 산업을 통해 발전시켰으며, 1960년에서 1980년까지 평균 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토지개혁을 통해 산업화의 기틀을 세운 장개석 국민당 대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강력한 발전기반을 다져 나갔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대만은 새로운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인 강철·조선·자동차·컴퓨터 등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경제전략을 설정하는 등 한국과 일견 비슷한 발전방향을 세우게 되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였다. 한국은 고도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을 위해 국내 대기업을 육성하는 ‘성장 지향적 정책’을 사용한 반면, 대만은 기존의 공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안정 지향적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기업이 성장하여 국가에 새로운 도전 세력이 되는 것을 우려한 대만정부가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화를 중심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하에서 근로자들의 조직화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 급진 변혁에 거부감을 갖는 중산층 집단을 양성하게 되어 경제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현재 대만기업 중 98%가 중소기업이며,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시간당 보수는 6.38달러로 한국(13.56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만정부는 ‘최소분야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과 ‘관료적 강권정책’을 고수하여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국내 경제 환경을 유지하였다. 노동시장과 노동

임금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제 운용에는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관료적 강권 정책을 사용하였다. 특히 1980년대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동시에 새로운 산업개발이 유발할 수 있는 재정위험을 일정 부분 감당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발전을 이끌었다.

현재 대만산업은 대만 수도인 타이페이(Taipei)와 남부의 카오슝(Kaoshiung) 두 개의 대도시에 몰려 있다. 대만의 IT 하드웨어 산업은 1980년 타이페이 남서쪽에 위치한 신주 공업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신주공업단지의 기업은 총 560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 상승한 수치이다. 1990년 말 대만정부는 광전자공학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하이테크 단지를 남쪽 타이난(Tainan) 지역에 설립하였고, 세 번째 단지는 중부 도시인 타이청(Taichung) 주변에 문을 열었다.

2002년 대만은 ‘Two trillion, twin star’(兩兆雙星) 계획을 통해 ‘Two Trillion Industry’와 ‘Twin Star Industry’를 향후 10년간 대만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Two Trillion Industry’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이 두 분야가 연간 1조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투자하고, ‘Twin Star Industry’는 디지털콘텐츠(게

임, 엔터테인먼트)와 생명공학으로 이 두 분야를 대만의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92년 GDP 1만달러 돌파 이후 11년간 정체

대만은 대기업 및 자본집약 산업의 부재 뿐만 아니라 기업생산기지의 이전으로 산업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국내 생산단가의 상승으로 대만의 제조업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의 비중이 1986년 GDP의 39.4%에서 2004년 25.5%로 하락하고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상승하여 같은 기간 동안 GDP의 47.3%에서 약 67%까지 높아졌다.

한편, 대만에서 빠져 나간 제조업은 중국을 거점으로 삼기 시작하여, 대중국 경제의 존이 심화되고 있다. 2001년에 대만정부가 대중국 투자 규제를 완화한 이후, 1990년대 말부터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은 상당 부분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국 사업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대중국 사업을 하는 지역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져 경제활동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20세기 대만경제를 성장시킨 주역이었던 경제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그간 대만기업들이 이끌어 왔던 정책적 산업 보호로 인해 특정 산업들이 오히려 국제화 경향에 뒤처지거나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도 2004년 현재 상업은행의 60%를 국가가 통제하는 등의 규제로 인해 자본흐름이 제한되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의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간 대만이 고수해온 최소분야 최

〈표〉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2005년)

실질 GDP 증가(%)	4.1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평균, %)	2.3
current account balance(미국\$)	16,400,000,000
환율(싱가포르\$: 1 미국\$)	32.1
인구(명, 거주자 기준)	22,800,000



대만 타이페이의 야경

소규제의 적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낮은 임금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커지고 포괄적인 복지급여의 제공과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패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더 이상 강력한 정부통제의 경제환경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누적으로 대만은 1992년 GDP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1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2001년 정권교체 후 정치혼란이 지속되고 노사분규와 지역갈등이 급증하면서 대만의 GDP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국가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인도와 중국이 주요 경제국으로 떠오르는 등 신

흥 경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록 미국이 여전히 경제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빠르게 세계경제에 통합되고 있으며 강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05~2015년 사이 각각 6.8%, 5.5%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은 대만에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도래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미 대륙을 중심으로 FT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의 사회적·경제적 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ASEAN-중국의 새로운 경제네트워크가 2010년 결성될 예정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역경제의 선두에서 기 위한 혁신을 통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혁신서비스가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차

지하는 것이 산업경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지식서비스는 특정한 개발 영역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아웃소싱의 국제화로 인해 서비스 생산에서 노동의 국제 분업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의 생산과 고용구조에도 주요한 함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환경친화적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에너지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생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만은 한정된 토지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자원 부족이

대만정부는 '최소분야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과 '관료적 강권정책'을 고수하여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국내경제 환경을 유지하였다. 노동시장과 노동임금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경제 운용에는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관료적 강권정책을 사용하였다.

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대외적 상황에 대응하여, 대만은 내적으로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의 느린 성장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창궐로 인해 대만경제 성장은 다소 감소되고 있다. 비록 정부와 민간 섹터가 내수를 확대하고 산업 향상을 가속화한 덕분에 경제는 회복의 길에 들어서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시기 동안에도 당장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외적 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발생하는 내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대만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개발 계획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스의 창궐과 같은 환경의 역습으로 인해 대만의 삶과 자산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가계획이 시급한 우선과제로 등장하였다.

둘째,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공공투자는 국가발전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기반시설과 같은 상업화할 수 없는 재화는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대만정부는 과거 2년간보다 2004년의 정부투자가 확충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진단하고, 공공투자액의 감소가 대만의 기반시설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IMD의 보고서에서 기반시설 경쟁력 순위가 전체 순위에 비해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를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재정 개혁과 정부 개편을 통해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만정부는 최근 경기순환과 세금감면 및 비과세의 효과로 인해, 실제 정부예산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뒤쳐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세수/GDP)은 줄어들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행정부조직 통치에 대한 기본법」이 2004년 6월 제정되어, 정부조직 재충전과 재창안을 통한 지속적인 진보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자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총 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균 출산한 아동의 수)이 1984년 2.1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2003년 1.2명까지 하락함과

동시에, 대만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 집단, 지역단체 그리고 기타 형태의 '조직적 사회자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만의 공적 섹터에서 사회안전망은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으나, '신뢰'와 '상호작용'과 같은 '인지적 사회자본'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으로, 산업개발 분야에서 지식과 향상된 기술능력을 지닌 인력의 수요는 늘고 있으나, 동시에 1차 노동의 수요는 줄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고용의 차이가 확대될수록 소득의 평등한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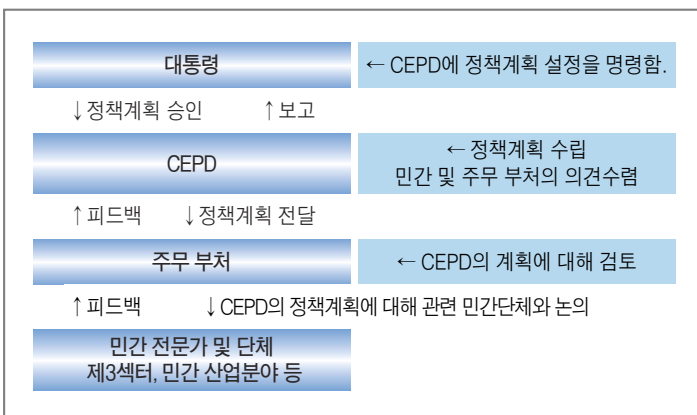
국가발전계획 '도전 2008' 추진

2002년 대만정부는 WTO 가입과 더불어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국가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적응하고 국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6개년 국가발전계획인 '도전 2008 국가발전중점계획'(Challenge 2008-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만을 'Green Silicon Island'로 개발하고자 주요 3분야의 개혁과 4개 부문에 대해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약 750억달러의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세계화, 지역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외적 변화에 대응하고 과거 노동집약 산업이 중심이었던 대만을 지식기반 산업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개혁 작업은 금융·재정·정부 개혁 등 3개 부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부패한 정치에 대한 정치적 개혁, 국가의 오랜 통제를 받았던 금융개혁,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그림 1> 종합전략 수립의 전달체계



위한 국가의 재정개혁을 대표적인 개혁 3분야로 설정하여 정책 환경과 실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개혁을 통해 '부패 정부' 이미지의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잠식시키고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하던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 가지 투자 분야는 인력투자 확충, 연구개발의 강화, 국제 물류센터 개선, 고품격 생활환경 창조 등으로, 이는 다시 10개의 주요 실행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인력투자 확충을 위해 지식사회를 이끌 수 있는 E-세대 인력을 배양하는 계획을 실행한다. 인적자원의 양성은, 부족한 대만의 자원을 대체하고 내부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핵심적이다. 영어와 같이 국제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평생교육을 정착시킴으로써 인력의 질적 가치를 높이고, 변화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다.

둘째, 연구개발의 강화를 위한 투자분야에서는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지식기반 산업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산업가치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생산을 증대하는 계획을 실행한다. 지식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및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며 산업 가치를 향상시켜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대만 경제의 경쟁력을 증진한다.

셋째, 국제 물류센터로서의 발전을 위해 대만의 물류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의 지역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토개발계획을 실행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대만을 'e-Taiwan'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대만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며, 새로운 지역 커뮤니

터를 개발하는 등의 계획을 실행한다. 대만은 부족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현재의 자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어질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산업은 대만의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만은 독특한 지질학적 위치와 다양한 인적자원 및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대만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국토개발계획을 통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조업의 감소로 줄어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경제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산업기술의 개발을 조장한다. 또한 갈수록 커지는 빈곤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자원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 계획은 대만을 아시아 제1의 국가, 전 세계 3위권 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 목표하에 ①세계 최고의 상품과 기술을 15개 부문 이상 보유 ②외국 방문객 수 두 배로 신장 ③연구개발(R&D) 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로 증대 ④실업률 4% 이하로 감소 ⑤평균 경제성장률 5% 이상으로 상승 ⑥인터넷 사용자수 600만 이상으로 증대 ⑦7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943년에 촬영된 故 장개석 총통(당시 중국 국민정부 주석)과 그의 아내이자 훌륭한 외교참모이던 고 송미령 여사의 생전 모습

대만의 발전전략은 '경제건설위원회'(이하 'CEPD';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Executive Yuan)를 통해 종합적으로 설계·발표된다. CEPD는 행정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관련 부처의 장관 및 금융·노조·행정부 등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학계인사 중 대통령의 지명을 통해 선정된다. 효과적인 경제계획 수립과 포괄적인 국가 경제개발 추진이라는 목표를 가진 기관으로, 1948년 설립되어 경제계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계획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CEPD는 행정부의 자문위원회로서 국가 경제개발의 전체 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에 제출된 개발계획·제안서·프로그램 등을 평가한다. 또한 관련부처의 경제정책 입안 활동을 조정하고 발전 계획·방법·프로그램의 실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

2002년 대만정부는 WTO 가입과 더불어 6개년 국가발전계획인 ‘도전 2008 국가발전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만을 ‘Green Silicon Island’로 개발하고자 주요 3분야의 개혁과 4개 부문에 대해 투자계획을 중심으로 약 750억달러의 예산 투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밖에도 IMD나 WEF에서 발표하는 대만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관리하는 등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국가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CEPD가 중심이 되어 전략을 수립하면, 하위 기관을 통해 검토 및 보충되는 과정을 거친다. CEPD가 포괄적인 계획안을 각 부처에 전달하면 각 부처는 관련 비즈니스 섹터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의 리뷰가 끝난 계획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인 계획안이 발표된다.

CEPD는 부처 및 각 분야의 대표자로 구

성된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의 설립 및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각 분야 간 업무협의를 한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매 분기별 포괄적인 리뷰를 행한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활발하여, 비즈니스 섹터와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린다.

2000년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가종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생성되었다. 2001년 총리의 주제로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와 경제환경 향상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2001년 ‘National Economic Develop-

ment Conference’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도출된 100여개가 넘는 결론은 ‘Challenge 2008’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구체적인 국가정책에 반영되었다. 특히, 기반시설의 확충, 인력양성과 노동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방안 확충, 산업발전을 위한 국토개발 등의 아젠다는 ‘Challenge 2008’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과학기술전략 통해 경제발전 꾀해

대만은 대외적 고립과 국민들의 반발 등 대내외적인 불안을 극복하고자 국가의 내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행한다. 대만의 내부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전략은 1970년대 후반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대만은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대만의 경제발전은 70년대 후반부터 기술개발을 통한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환경과 공존 가능한 기술의 개발 및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근의 ‘지속가능한 환경’의 개념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대만의 과학기술 혁신개발 계획은 종합계획 수립 기관 및 기업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의 속에 수립·추진된다.

대만의 경우 1973년 하이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R&D 센터로 산업 기술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산업기술의 육성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었다. 1976년에는 대만산업의 향상을 위해 하이테크산업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신주 과학단지 건설이 결정되었다. 또한 과학 및 기술발전을 증진시키는 책임을 지닌 최상위의 국가 기관인 국립과학협의회

<그림 2> 대만 과학기술계획 의사결정 및 재정지원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의 느린 성장과 사스(SARS)의 창궐로 인해 대만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 (사진) 지난 2003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TO)가 대만 사스환자 발생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대만 시민들이 병원 진찰을 기다리고 있다

(이하 'NSC' ; National Science Council)는 1978년부터 '과학기술 발전정책 4개년 계획'을 설립하여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21세기 초에 들어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징조가 불안한 상황에 처하였다. 한편으로, 90년대 침체에 빠진 아시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사스의 창궐은 더 큰 경제적 불안을 야기했고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과학기술의 향상에 대한 중요성과 급박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만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들은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과학기술 발전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자원의 측면에서 국가는 저마다 연구개발에 투입할 재정지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는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GDP의 3%가

R&D에 투입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2002년 기준 국내 총 지출에서 R&D에 투자되는 지출이 GDP의 2.3%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실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만은 2003년 성장경쟁력 부분에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 5위에 올라있으며 기술 분야는 3위를 기록하여, 과학기술 능력에 대한 국제적 인지를 얻은 경쟁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순위를 바탕으로, 대만은 현재까지 일궈온 성과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만정부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지역과 해외 양쪽에서 중대한 기술변화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05년 발표된 '제7차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전략과 목표의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지식혁신 시스템을 보강,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강조하여 건전한 기반하에 과학기술 정책시스템을 세우도록 한다.

둘째, 산업경쟁에 있어 우월성을 창조한다. 이를 위해 인력계획을 세우고 인력의 효과적인 사용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인력을 응집하여 산업경쟁에 있어서 강점을 부각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구 만 명당 32.3명 수준의 연구 인력을 75.9명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기술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문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문연구 기준을 확립하여 뛰어난 학문분야를 개발, 향상시키고 독특한 연구 분야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 증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속적인 개발을 증진한다. 대만의 부족한 자원과 정치적·지리적으로 주어진 산업개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혁신을 고양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한다.

최근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단기적인 대통령 임기에 따른 단기적 정책전략이 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가 존재하며, 제조업의 공동화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국민복지와 소득격차 확대에 의한 내적 갈등이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수출용 대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만은 자체 방어기술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사진) 지난해 7월 실시된 '한광(漢光) 22호' 군사훈련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최소한 GDP의 3%까지 끌어올린다.

다섯째, 시민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실질 적용을 지원하여 상용화에 힘쓰며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높여 시민의 과학기술 수준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자주적 방어 기술을 강화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대만은 군사적으로 자체 방어기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방어 기술시스템을 향상시켜 자주적 방어 기술을 강화한다.

2005년 발표된 7차년도 계획에는 6개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7개의 분야에 대해 17개의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기관이 이 계획에 참여한다. 총 185개의

정책방법이 실행되는데, 계획의 실행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중 28개의 정책방법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실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5년 기준 약 19억달러의 예산이 이 계획에 배정되었다.

과학기술정책은 '국립과학협의회'가 중심

대만경제가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계획의 수립은 이미 1970년대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정부는 1978년부터 4개년 계획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세계화로 인해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1999년 '기초과학

기술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국가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대한 책임부터 전략수립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국립과학협의회(NSC)는 2년마다 과학기술 발전상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발전방향과 계획을 제시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NSC는 4년마다 과학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4개년 계획의 실행 2년째에 백서를 발간하여 현 계획의 실행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이 수립되는 연초에는 과학기술계획에 대한 대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관련 부처 및 기관, 학계인사, 기업대표 등이 참여하며, 이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기초로 과학기술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각 분야마다 실행주체, 실행 목표 및 실행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계획 수행을 보조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최고위 회의인 대만 과학기술협의회는 1998년 6월부터 행정부 단위에서 3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고 수행의 총괄평가, 과학기술의 보호방안 등 계획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계획의 수행을 돕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과학기술정책의 수행에 대한 검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STAG'; the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Group)에서 맡고 있다. STAG는 매년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어, 주요

R&D분야와 국가 과학기술발전 계획을 검토하여 제출한 정책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대만은 기업과 국가 간 정보공유 및 교환과 다양한 이해를 합의된 정책과 공통의 목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만 경제구조로 인해, 전국 산업연합회(이하 'CNFI' ; Chinese National Federation of Industries)가 정부와 기업 간의 조정기구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CNFI는 정부의 정책형성과 관련하여 산업향상을 위한 정책 형성 및 실행과 산업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형성 및 실행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CNFI는 1990년부터 산업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변화의 조정 및 중재를 위해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각 도시에서 총 31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에게 법령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정부정책 조정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제환경이 변화하면 CNFI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 새로운 법령 제정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기업 환경에 적용할 규제 또는 법령이 전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의 혼합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산업조사 및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산업 R&D에 대한 조사와 기업의 최근 생산 시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조사 결과를 통해 기술기반의 산업정책 형성에 기여하였다. CNFI를 통해 정부는 성공적으로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기업의 현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실질적인 정책 형성을 도모하였다.

CNFI는 1995년부터 매달 부처 장관급과의 회의를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현안을 토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등 정책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현 산업에서 요구되는 R&D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끌어낼 수 있으며, 과학기술을 실제로 산업에 적용하

기 위한 효율적인 개발과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산업공동화·양극화 해소 등이 과제

대만은 2002년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지역 경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의 방해로 인해 개별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큰 진전이 없는 등 대외적으로 상당한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술주도 산업발전 정책과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발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략을 펼쳐 현재에 이르렀다.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이 변화한 2000년을 전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등 국가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행과정에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즈니스 섹터에 친화적인 전략 수립을 하고자 한다.

대만은 대체로 단기 또는 중기계획을 통해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등과 같은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하나, 대만과 같이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비교적 단기적인 계획안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대만은 국가경쟁력 순위 등 외부의 평가에 한국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IMD와 WEF 경쟁력 순위에서 공히 낮은 평가를 받은 기반시설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는 등 높은 경쟁력 평가 순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만은 2006년 IMD 세계경쟁력 순위급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순위가 급락한 것은 '정부의 사회적 통합 강조', '정책 일관성', '정치 불안' 등과 관련한 서베이 데이터 결

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은 '대통령 가족의 부패 스캔들'이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여 조사 실시 당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신뢰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최근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단기적인 총통(대통령) 임기에 따른 단기적 정책전략이 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가 존재하며, 제조업의 공동화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국민복지와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내적 갈등이 확대되는 등 단순 경제성장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간 안정적인 전략과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경제성장이 이룩한 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방안을 주목하는 것은 한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

◀ 관련 자료 ▶

- 임성학(1997), '경제발전전략에 의한 사회집단의 형성과 민주화 : 한국과 대만의 비교', 한국정치학회 1997년 연례학술대회, 한국정치학회, 서울
- 정성화(2001), '중화민국(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전망 : 정당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3권 제2호, p. 117~140,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서울
- '대한상의,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해야', 매일경제, 2007년 3월 20일, 박봉권 기자/노원명 기자
- *National Development Plan*,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Executive Yuan, Taiwan, R.O.C, 2002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lan(2005 to 2008)*, National Science Council, Executive Yuan, Taiwan, R.O.C, 2005
- *Country Profile: Taiwan*, EIU, 2006
- *Policy networks in South Korea and Taiwan during the democratic era*, Hisahiro Kondoh, The Pacific Review, Vol.15 No.2 p.225~244, London, Routledge, 2002
- 대만 정부 홈페이지(<http://www.gio.gov.tw>)
-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홈페이지(<http://www.cepd.gov.tw/index.jsp>)
- National Science Council 홈페이지(<http://www.nsc.gov.tw/en/>)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시욱

KDI 연구위원
(swlee@kdi.re.kr)

- 연세대 경제학과
- 美 University of Michigan, Ph.D.
- 국제무역, 경제성장, 생산성분석, 산업조직

최 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경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문턱이 분주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 현상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나 경제전문가들에게는 대목(?)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전문가들이 현재 경제여건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처방전을 낼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연구경력이 일천한 풋내기 경제학자의 판단이기는 하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일례로, 한·미 FTA 협상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자. 정치외교적 측면 등도 중요 고려대상이기도 하나,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경제협정인바, 한·미 FTA의 득실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전문가의 몫이다. 현 시점에 있어 개방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시장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최근의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은 수입경쟁 부문(import-competing

어느 풋내기 경제학자의 고민

sector)을 중심으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첨단기술 이전의 촉진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대외개방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사고의 근저에는 여전히 개발연대의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주력상품의 수출호조에 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 확대를 통한 외환 확보’가 곧 우리의 성장방정식이므로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상당한 공허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념적 혼재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반대진영에 여러모로 반격의 발미를 제공하였으며, 낮은 수준의 FTA 협

으로서 (폴 크루그만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따리 장사를 하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느낌은 풋내기 경제학자로서의 지나친 생각일까?*

중국 송대의 주자(朱子)는 학문의 기본 요소로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을 내세운 바 있다. 여기에서 궁리란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노력이며, 거경이란 학문하는 자세로서 스스로 삼가고 조심함을 의미한다. 궁리와 거경은 서로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이면서 하나이며 하나이면서 둘인 상호발전적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학은 실증과학으로서 상대적으로 궁리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태처럼 엉켜 있는 정책의 판단 근거를 제공할 때에는

“ 개방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시장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한·미 FTA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경우, 여전히 개발연대의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정으로 귀착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가령,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당초 관세율 축소에 집중함으로써 대미 무역적자의 확대라는 우려와 함께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바 있다. 뒤늦게나마 생산성 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대치를 발표하였으나, 한·미 FTA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 있어 한·미 FTA 관련 논의가 여전히 엄밀한 연구결과나 경제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 없이 개인적인 신념 혹은 호구지책의 방편

실천과학으로서 궁리 못지않게 거경의 자세가 경제전문가들에게 요구된다.

이제 경제전문가들은 그만 보따리를 풀고 연구실로 돌아가 차분한 자세로 본의의 연구작업에 치중하여 전문성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경제전문가들의 획기적인 인식 및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 폴 크루그만 교수는 <Peddling Prosperity(1994)>라는 저서에서 정치가들과 야합한 경제학자들-그의 표현을 빌리면, 보따리 장수-의 허위와 가식에 가득 찬 이론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